

연구보고서

**외국 정당의 정치교육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2012. 9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조찬래(충남대학교)

공동연구원: 장선화(연세대학교)

이한규(한림대학교)

임종헌(한양대학교)

연구주관: 신두철(선거연수원)

**외국 정당의 정치교육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201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提出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貴中

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연구용
역사업인 「외국 정당의 정치교육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9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장
연구책임자 조찬래

〈 요약문 〉

정당의 당원 교육은 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 그리고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교육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김영태 2006, 신두철 2009, 이동윤 2012).

이러한 당원교육이 자발적인 정당참여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당파성에 제한받지 않는 민주적 정치의식과 활동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당원교육의 기본전제와 조건, 그리고 교육방식 등 당원교육의 원칙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당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원이 시공간적으로 처한 현실, 즉 당원이 직면한 정치적 문제에 기초해 당원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주의 교육원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 활동을 돕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으로서 정치이념과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에 대해 법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개방성 및 정당에 대한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이후 현대 독일의 정당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정당에 독립적이면서도 연방정치교육원 및 주정치교육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병존은 교육의 과제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독일의 정치교육체계가 갖고 있는 다원주의적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스웨덴 정당의 정치교육은 아래로부터 확산된 대중운동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계몽주의적인 동시에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교육 체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어왔다. 따라서 스웨덴 정당들의 정치교육은 형식과 내용,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개별 정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교육 및 리더십 훈련 차원에서의 지역 공동체 성인교육 제도들과의 협력 하에 실행·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 시민교육과 정당 정치교육의 연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자유시민교육과 공교육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스웨덴의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정당의 정치교육은 지역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성인 정치교육활동과의 연계 속에 진행된다. 오랜 성인교육과 정치교육 경험에 의해 노동자 및 성인교육협회들은 기초적 자료와 데이터, 커리큘럼 등을 축적하고 있으며 각 정당들과의 조직적 연계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당원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되고 있다.

보수당과 중앙당, 자유당은 성인교육협회를 통해 당원 교육 및 리더십 훈련, 정당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정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교육 주체의 차이는 스웨덴의 대중운동 및 노동운동이 지역의 풀뿌리 교육단체와 함께 성장해온 근대 이후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스웨덴 정당의 정치교육은 두 나라의 정당정치만큼이나 한국의 현실과는 다르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과 제도화 과정, 교육 체계의 상이성을 무시한 채 두 나라의 정당정치교육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가 한국의 정당정치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의 정당들은 정당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체계적 정당정치교육이 거의 부재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치는 정당정치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도전이 특징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가 확립된 이래 보다 성숙하고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와 사회의 괴리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들이 사회 속의 정당이 수행해야할 정치사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에서처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과 같은 풀뿌리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성인교육의 일환으로서 정치교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으로 먼저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보다 확장하여 정당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개별 정당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리더십 훈련 및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간다면 한국형 정당정치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의 성숙과 합의적 정당정치 문화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첫째, 정당 정치교육 주체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민·관·정당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정당이 당원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치교육의 주체가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선거연수원은 공직선거법의 제약으로 위축된 정당의 당원교육을 대신하여 광범위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관(官)주도의 정치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자산, 즉 사회 쟁점 현안에 대한 파악 능력,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대안 제시 능력, 전문가 풀의 확보 등의 자원을 공유한다면 정치교육은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즉, ‘민·관·정당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정치교육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정당 정치교육과 당원교육의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개선방안으로는 당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의 문제이다. 현재 교육시설의 부족은 정당의 당원교육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의 여러 제한 규정과 정당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수원 시설을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임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당이 별도의 연수원 건물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당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2장 독일의 정당 정치교육	9
1) 독일 정치교육 체계 개관	9
2) 독일 정치교육의 협력체계	11
가) 연방정치교육원	12
(1) 목적과 사업	13
(2) 가이드라인	13
(3) 협력	14
(4) 내부적 협력	14
(5) 설립과 역사	15
(가) 지역봉사를 위한 제국본부 1918-1933	15
(나) 연방정치교육원의 설립과 체계화 1952-1969	16
(다) 변화와 개혁 1969-1981	18
(라) 합병과 기술적 진보 1981-1989	19
(마) 통일 독일을 위한 정치교육 1989-1998	19
(바) 새로운 과제, 새로운 길 1999-현재	21
(6)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	23
(7) 연방정치교육원 주요사업	26
(8) 예산	29
(9) 연방정치교육원 감독위원회	30
(10) 연방정치교육원 학술자문단	31
나) 독일정치재단	32
(1) 역사적 발전	32
(2) 정치 재단 조직	34
(3) 정치 재단과 정당	35
(4) 정치 재단의 과제와 업무	35

(가) 정치교육	36
(나) 장학사업	37
(다) 연구와 정책 조언 사업	38
(라) 국제협력	38
(마) 정치재단의 예산	40
(5) 독일 정치재단의 공동합의서	41
(6)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42
(가) 설립의 역사	42
(나) 소개	43
(다) 가이드라인	44
(라) 업무	44
① 아카데미	44
② 정치 및 정책 상담	45
③ 국제협력	45
④ 정치교육	47
⑤ 학술활동 및 역사자료 보관	47
⑥ 장학 사업 및 문화	48
(마) 직원과 구조	48
(바) 재단의 예산	49
(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50
(가) 역사	50
(나) 소개	51
(다) 업무와 부서	52
① 정치교육	52
② 장학	54
③ 경제 및 사회정책	55
④ 국제협력	56
⑤ 도서관과 사회민주주의 문서보관소	58
(라) 재단 예산	59

제3장 스웨덴의 정당 정치교육	63
1) 스웨덴의 정치교육 전달체계	63
가) 스웨덴의 정치교육 제도화 과정과 변화	63
(1) 스웨덴 시민교육의 역사와 제도화	63
(2) 사민주의적 교육 이념과 교육정책: 노동자 코뮌과 사민주의적 교육정책	68
(3) 1990년대 이후 교육정책의 변화	72
나) 스웨덴 정치교육 제도와 특징	74
(1) 스웨덴의 정치교육 협력체계	74
(2) 노동자교육협회(ABF, Arbetarnas bildningsförbund)	77
(3) 성인교육협회(SV, Studieförbundet Vuxenskolan)	83
(4) 올로프 팔메 국제센터(Olof Palme International Center)	85
2) 스웨덴 정당 정치교육	86
가) 스웨덴 정당 정치교육 개요	86
나) 사민당의 정당 정치교육	87
(1) 사민당의 당원 교육	88
(2) 스웨덴사민당(SAP) 당원 및 리더십 교육 사례	90
다) 사민당 이외 스웨덴 주요 정당들의 시민정치교육	101
(1) 보수당(Moderterna)	101
(2) 기타 정당	102
(가) 중앙당(Centerpartiet)	102
(나) 자유당(Folkpartiet)	105
(다) 녹색당(Miljöpartiet)	106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9

[표 목차]

<표 1> 연방정치교육원의 중점 교육 내용	23
<표 2> 2008~9년 연방정치교육원의 출판물 목록과 판매부수	27
<표 3> 연방정치교육원 예산	29
<표 4> 연방정치교육원 사업항목별 수입과 지출	30
<표 5> 연방정치교육원 기구표	32
<표 6> 독일 정치재단	33
<표 7>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2011년 예산	50
<표 8>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0년 예산	59

[그림 목차]

<그림 1> 독일 정치교육 개관도	10
<그림 2> 독일의 정치교육 협력체계도	12
<그림 3> 연방정치교육원의 대내외 협력관계구조	24
<그림 4>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조직도	49
<그림 5>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조직 구조	53
<그림 6> 분야별 참여시민 수	54
<그림 7> 스웨덴 자유성인교육 협력체계	75
<그림 8> 지자체 성인교육과정 2000년 가을 1학년인 학생들 중 2000년 봄과 2003년 가을 사이 주요 활동으로서의 고등 교육과 지자체 성인 교육 변화	80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정치 위기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김용호 2008; 박경미 2010; 장훈 2010; 조대엽 2009; 채진원 2011; 조희정·박설아 2012). 이러한 위기론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 존립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거를 통한 권력의 획득과 유지이다. 권력 획득이라는 사적 이익 추구가 어찌면 당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공적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즉 국민의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집약하여 표출하며, 정부구성과 운영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적인 기능 또한 수행할 것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당의 민주성, 책임성, 반응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정당정치 활성화가 도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의 당원 교육은 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 그리고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교육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김영태 2006; 신두철 2009; 이동윤 2012).

정치교육은 사회·정치적 질서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집단, 조직, 제도 및 매체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집합적 개념이다. 이러한 광의의 정치교육의 개념은 거의 정치사회화의 개념과 유사하며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허영식·신두철 2007). 또한 정치교육이 시민의 민주적 능력과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와 이성적 토론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표현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을 통해 시민의 민주적 능력과 덕성을 함양한다는 것은 곧 바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영태 2006). 이런 측면에서 시민의 정당참여와 정당의 당원교육이 정치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당원교육이 자발적인 정당참여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당파성에 제한받지 않는 민주적 정치의식과 활동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당원교육의 기본전제와 조건, 그리고 교육방식 등 당원교육의 원칙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이동윤 2012). 왜냐하면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당원교육을 통해서만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과 능력이 함양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가치와 세계관이 일방적으로 강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당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당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원이 시·공간적으로 처한 현실, 즉 당원이 직면한 정치적 문제에 기초해 당원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주의 교육원칙이 절실히 요청된다(김영태 2006).

하지만 주요정당은 체계적인 당원교육에 필요한 연수시설, 교육예산, 교수요원 등 인력 및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당원교육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당의 당원 교육은 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 그리고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교육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책조정의 어려움, 개방적인 의사소통구조 고려와 더불어 정당환경 뿐만 아니라 정당 기능역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정당의 역할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 보다는 대표된 이익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정책기능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될 필요성이 있으며(정진민

2005), 이때 국민과 함께 정당의 당원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정당 존립의 기본적인 목적이 권력의 획득과 유지라면, 이를 위해 정치충원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의 성공적인 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유능한 정치지망생을 발굴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정치적 충원은 정당의 일상적인 정치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지망생을 정치 사회화하고 장래의 정치지도자로 육성할 수 있다.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정책패키지를 개발하여 유권자와 당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홍보하고 설득하여 견고한 강령으로 만들어나간다면,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상승할 것이고 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 또한 제고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의 당원 교육은 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 그리고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독일과 스웨덴의 정당 및 정당재단 정치교육의 전달체계와 제도적 장치,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의 국가지원에 의한 정당 정치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적 관점을 통해 선거연수원의 정당 당원교육 및 민주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당 당원연수 및 정치교육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당 당원교육을 통한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독일의 정당 정치교육

제2장 독일의 정당 정치교육

1) 독일 정치교육 체계 개관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모든 교육체계와 연계되어 있으면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초·중등학교, 대학, 일반 성인교육 시설, 학교의 청소년 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각기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통해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즉 학교에서 실시되는 유형과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이규영 2005,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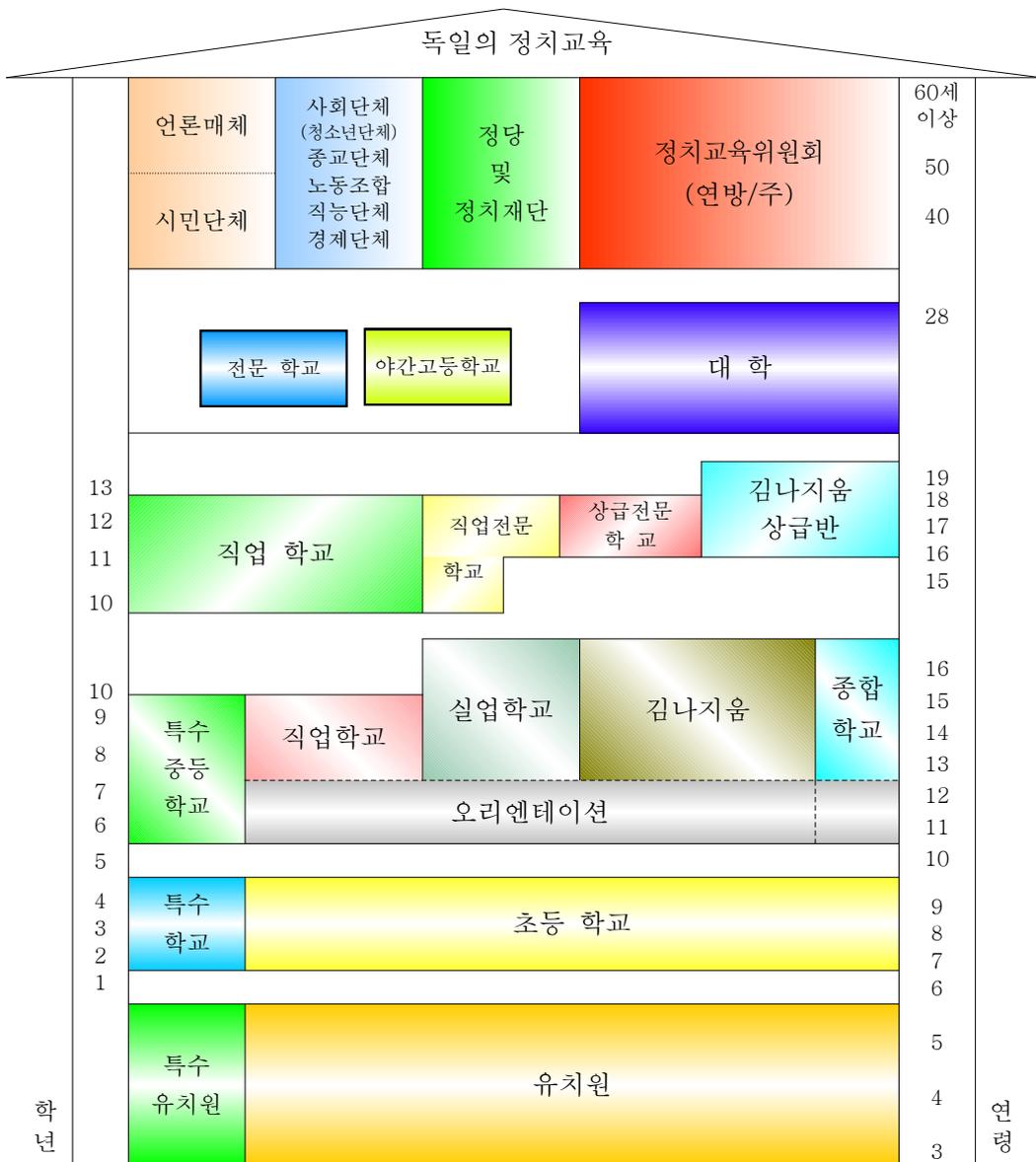
독일 정치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 정치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독일 학교체제는 초등학교(Grundschule), 주요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종합학교(Gesamtschule), 특수학교(Sonderschule)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각 연방주의 과제이다(신두철 2009)

학교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교육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 행동을 연습하고, 정치참여에 대한 능력과 자세를 배양한다. 초등학교에서는 경제사회, 도덕, 역사, 지리, 자연과학기술,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독일의 기본 가치와 이념, 국제관계를 배운다. 여기에서 학습중점은 기본법 제1조의 인간존엄성과 개인의 자유, 제20조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실현문제들이다. 나아가 산업사회에서 이행능력과 정치참여능력을 기른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 학습이 학교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이것이 학교 밖에서 평생교육과정으로 연장된다(이규영 2005, 173).

학교 밖 정치교육은 취학전 교육(유치원, 탁아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자율청소년 센터, 청소년 휴게소, 연방청소년 협회에 소속된 각종단체), 성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 정치교육의 경우는 정치적 판단과 분석

그리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성인교육의 경우 시민대학(Volkshochschule) 또는 부분적으로 시민대학과 같은 공공시설과 노동조합, 교회, 각 정당과 밀접한 정당재단, 민간단체나 협회 등과 같은 비공공시설과 단체로 구분된다. 그리고 성인교육법, 계속교육법, 교육휴가법 등의 제정과 관련하여 공인시설과 비공인시설이 구분된다.

<그림 1> 독일 정치교육 개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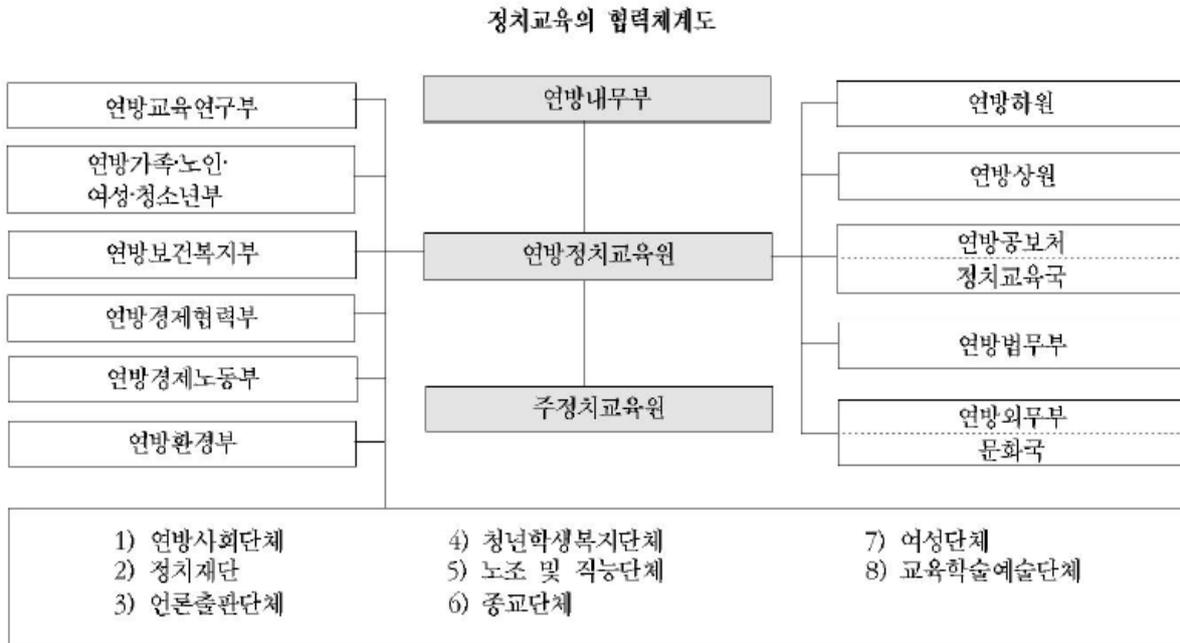
출처: 정창화 2004, 406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정치교육에서는 내무부, 연방정치교육원 및 지방정치교육원, 시민대학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나아가 사회의 다원적 구조를 반영하여 자유민간단체의 자율적 교육조치를 장려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 밖 정치교육을 수행한다.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사회단체로 교회, 노동조합, 정당재단, 직업단체, 경제단체, 정당, 청소년 및 복지단체가 이에 속한다.

2) 독일 정치교육의 협력체계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 간에 정치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 정치교육 네트워크의 특징은 다양한 정치교육 담당기관과 단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주체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방정치교육원과 정당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재단들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들이지만, 필요시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시민정치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해외에 지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연방정치교육원은 해외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정당재단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가지고 정치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연방정치교육원은 특정 정당재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신두철 2009; 박광기 2010, 114).

<그림 2> 독일의 정치교육 협력체계도



출처: 박병석 2004, 4.

아울러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 협력, 지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와 관계는 무엇보다도 연방정치교육원과 각 주정치교육원의 예산, 인사, 업무를 결정하는 소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정치교육원은 연방정치교육원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각 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치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두철 2011; 박광기 2010, 114).

본 연구는 독일정치교육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전체 정치교육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원과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의 수행체계와 운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연방정치교육원

독일연방공화국은 나치와 분단의 경험 때문에 민주주의, 관용 그리고 다원주의에 근거하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켜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52년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을 만들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은 세계화의 요구와 지식정보화 사회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시민이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과 사업

연방정치교육원의 목적은 독일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적 의식을 고양하고,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연방정치교육원은 역사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 과정들에 관한 인식, 이해와 관점을 가진 교육 그리고 토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킨다.

국민들이 관용,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고, 독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교육원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교육원은 역사적이거나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그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견해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치교육의 내용이나 전달방식은 다양한 시민조직들의 경험과 요구를 받아들여 실행하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가능한 다양한 전달방식과 전달기능을 이용한다.

(2) 가이드라인

연방정치교육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적 정치 문화를 실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초당파성과 학문적 균형의 원칙을 지킨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의 교육과업은 고유의 사회·정치적, 교육적 그리고 저널리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연방정치교육원 2010년 연간보고서).

연방정치교육원은 사회적 변화의 근원을 설명하는 정보와 교육에 대해 검토하고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 요구에 부응한다. 또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교육원은 시민들의 문의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답변하며 요구와 비판을 받아들인다. 교육조직으로서 연방정치교육원은 업무진행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발전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성주류화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공동체적 과업으로 이해하며 조직적이며 실천적 영역에 적용한다. 정치교육원에 위탁된 공적 자금은 공정하게 지출하며,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용한다. 또한 업무수행에 있어 지속적으로 감사 받을 의무를 실천한다.

(3) 협력

연방정치교육원은 위임된 일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 정치, 교육기관, 시민사회에 영향을 주는 학문과 미디어 모든 부분을 총괄한다. 무엇보다도 주정치교육원과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단체와는 항구적인 협력관계에 놓여 있다. 그와 함께 교육원은 다른 교육기관, 비정부조직, 장학재단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발전시킨다.

그들의 파트너와 정치교육 업무의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주도하여 협력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험을 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한다.

(4) 내부적 협력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치교육원의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각 부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연방정치교육원 내부적 협력은 공개성, 준비성, 공정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익히고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한 준비, 상호신뢰 그리고 가치 공유에 기초한다.

모든 직원들은 가능성, 혁신성에 자극받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업무영역과 과제영역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참여한다.

(5) 설립과 역사

(가) 지역봉사를 위한 제국본부 1918-1933

독일 정치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연방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은 1918년 3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설립되었다가 나치체제에서 폐쇄된 ‘지역봉사를 위한 제국본부(Reichzentrale für Heimatdiens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제국본부는 1차 대전 패배 후 전쟁의 후유증 대신에 국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신임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홍보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은 1933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동안 지속되었다. 호헨졸러른가가 통치하던 시절의 독일인은 단지 노예에 불과했지만, 공화국 시절의 독일인은 시민이었다. 시민으로서 독일인은 자신의 권리를 책임감 있게 누려야 했다.

이러한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국본부는 “국가시민교육(staatsbürgerlichen Erziehung)”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많은 지성인들과 정치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921년 제국본부는 제국의회를 통해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봉사를 위한 제국본부는 대외정치적, 경제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 정당의 정신이 아니라, 독일전체의 관점에서 객관적 해명에 봉사하여야 한다.” (Strahl 1928, 14)

당시 제국본부의 수장이었던 리하르트 슈트랄은 독일국민의 공적 삶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기 위해 국민은 단지 국가의 이익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였다. 제국본부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삶, 정치적 영역, 정치적 판단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였다.

제국본부는 2차 대전 이전에 유럽에서 존재하던 유일한 교육조직이었다.

그들은 조직적 수단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인들과 대중적인 글을 통해 자발적이고 민주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였다.

(나) 연방정치교육원의 설립과 체계화 1952-1969

전후 독일인들은 전쟁 휴유증과 파괴로 인한 고통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전쟁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했다. 우선 독일의 분단과 냉전체제의 돌입,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실현이 그것이다. 이는 독일이 동서냉전의 최전선국가로써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직접 대치하고 경쟁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독일인들을 새로운 민족적 동질감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교육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정치교육을 담당했던 '지역봉사를 위한 제국본부(Reichzentrale für Heimatdienst)'의 기본이상을 수용하여, 1952년 11월 25일 "독일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의 공고화와 확산" 차원에서 연방내무부 산하에 '지역봉사를 위한 연방본부(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63년 5월 19일 그 명칭을 연방정치교육원으로 바꾸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분단으로 독일인들에게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독일인이 한편으로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여망의 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점령군의 협조로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과 서방진영에 합류를 동시에 실현시켜야 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독 정부의 탄생으로 서독은 공산주의 이념 확산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치교육의 활성화와 강화가 요구되었다.

- ② 전후 서독 국민들은 과거의 국가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세계정세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에 대한 독일인의 무력감과 미래 독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 ③ 전통적으로 독일의 학교교육은 국가중심적이고 상명하달식의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있어서 민주주의 사회건설에 부적합했다. 이에 대한 극복 전략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당연한 결과였다.
- ④ 국가사회주의를 경험한 독일은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의식과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정치교육은 대단히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심익섭 1998, 287).

이처럼 독일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상황의 극복과 안정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며,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력과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능력, 그리고 새로운 규범과 미래의 도전에 대한 낙관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 등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정치교육을 적극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정치교육은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봉사를 위한 연방본부’와는 형태와 내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조직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새롭게 조직된 연방정치교육원 활동에 대해 1955년 독일문화장관회의(KMK)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후 독일정부 수립과정에서 야기된 정치적 불안이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며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정도로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사회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심익섭 1998, 288).

(다) 변화와 개혁 1969-1981

1969년은 독일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해였다. 최초의 사회민주당 출신 총리 빌리 브란트는 과감한 변혁을 주도하였다. 정치적·사회적 변화, 외교정책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긴장완화의 기대, 또한 강화되는 냉전체제, 독일 테러리즘, 실업의 증가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한계 인식 등이 앞으로 돌아올 10여년 간 대두될 문제들이었다.

1969년 9월 10일 연방정치교육원법을 개정하면서 기관의 과제를 “독일인들에게 정치상황의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적 의식을 확고히 하며 정치참여를 강화시킨다”고 규정하였다. 이 시기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던 때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학교교육에서의 새로운 학습과제의 개발과 함께 학교 밖의 교육에 대해서도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국가에 의한 정치교육은 “평생교육 내지 성인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정치교육의 목표는 성숙하고 자율적인 국민을 육성시키는 것”이라는 목표가 정립된 것도 이 때문이다.

1969년에 연방정치교육원의 전체 조직은 새롭게 개편되었다. 모든 업무는 5개 부서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대중매체’, ‘출판’, ‘학교외 정치교육’, ‘학교 정치교육’ 그리고 ‘중앙행정부’가 그것이다.

그것과 함께 항시적 계획 부처인 ‘동구연구소(Ostkolleg)’가 “1975년 12월 1일 동구연구소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만들어졌다. 동구연구소의 과제는 “회의를 통해 동구권 나라들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경제, 법, 정치시스템, 사회구조 그리고 공산주의의 역사에 대한 상이한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동구권 공산주의의 구조, 발전 가능성 그리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비교연구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우수성을 밝히는 것” 이었다(동구연구소에 관한 법률 2조).

이 시기에 있어 연방정치교육원은 매 시기에 제기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을 다룬 기관지 “정치와 현대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간하였고 주간지인 “다스 팔라멘트(Das Parlament)”를 발간하였다.

(라) 합병과 기술적 진보 1981-1989

80년대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남북갈등, 대량실업, 기술적 진보의 영향이었다. 특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관찰과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 뉴미디어의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정치교육에 있어서 뉴미디어의 사용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정보화시대에 맞춰 연방정치교육원은 1984년에 “뉴미디어” 담당부서를 신설하였다. 정치교육에 있어서 영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컴퓨터 게임과 화상을 이용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였다. 교육원은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정치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방송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텔레비전 시리즈물로 ‘홀로코스트’를 제작하였다.

1985년 개정된 법에 따라 동구연구소가 항시적 연구부처에서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식부처로 승격되었고, 동구연구소의 업무인 학술적 교육적 책임을 지속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학문적 조언업무는 동독이나 동유럽 연구의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되었고, 동구연구소의 업무는 연방정치교육원 위원회 안에서 각 위원들에게 정책을 조언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 통일 독일을 위한 정치교육 1989-1998

80년대 말과 90년대에 걸친 독일통일과 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유럽통합 등과 같은 세기적인 대전환기는 독일 국가 정치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었다. 체제경쟁의 종식과 독일 통일은 기대했던 자유로운 시대의 시작을 여는 것은 아니었다. 세계정세에 있어서 국지적 차원의 갈등은 유고슬라비아, 중앙아시아, 극동 아시아 지역 등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독일통일에 대한 열광과 냉전 종식이 지난 후 정치적 타락, 폭력 그리고 외국인 혐오, 분단 후 동독-서독 국민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통일 이후 연방정치교육원은 우선적으로 구 동독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였다. 과거 동독 지역에서 발행했던 많은 도서들, 자료들, 학교에서 도서실에 보내졌던 다양한 자료들, 정치와 역사에 관련된 사전류들, 정치교육 정보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집과 분석을 하였고, 구 동독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독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새롭게 건설된 통일 독일의 정치 과정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된 ‘연방정치교육원 업무에 대한 기본노선’을 강화·발전시켰다(1995년 6월 27일에 제정된 법률).

동구연구소는 1992년 ‘동서연구소(Ost-West-Kolleg)’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직의 변화는 이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서연구소는 중동부 유럽의 변화과정과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유럽통합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독일통일과 함께 이 연구소는 구 동독인들에 대한 정치교육의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갖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 되었던 전체주의적 사고를 지닌 구 동독인들을 교육을 통하여 공산체제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전쟁직후 서독인처럼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만큼 구 동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치교육은 정치교육원의 새롭고도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1997년 연방정치교육원은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시도를 한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www. bpq.de)를 개설하였고, 교육용 프로그램인 “그랍스타트 빈(Grabstadt Win)”, 게임 프로그램인 “콤스테트-데모크라티(Kommstedt-Demokratie)” 그리고 “콤스테트-발렌(Kommstedt-Wahlen)” 등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게임 프로그램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선거와 민주주의를 이해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80-90년대 통일 후 독일은 정치교육적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정치교육과목을 축소하였고, 연방정치교육원과 지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정치교육 활동이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독일 사회 내부에서의 정치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다. 1991년과 1998년 독일 정부는 독일 정치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평가는 민주주의를 위한 독일정치교육의 중요성과 근본적인 정신에 충실했음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에 걸맞는 결과는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원장과 지방정치교육원 원장은 “민주주의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Demokratie braucht politische Bildung)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 안에서 그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미래에 다가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교육이 필요로 하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바) 새로운 과제, 새로운 길 1999-현재

2000년대에 들어와 독일정부는 연방내무성을 중심으로 “더 현대적인 국가-더 현대적인 행정”이라는 모토 하에 정부 산하 모든 조직들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시민의 편의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행정의 효율성, 현대적 조직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경쟁 그리고 국가적 차원 서비스에서 현대적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연방정치교육원도 통일 이후 조직적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고 더 높은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업무부서와 조직체계를 진화시켰다. 이러한 진화는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 조직인 여론조사 연구소를 포함했다. 연구소는 2000여 명이 넘는 고객들의 정치적 물음에 답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론, 행사 그리고 멀티미디어 생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2001년 4월 새롭게 제정된 연방정치교육원법은 연방정치교육원이 새로운 지도체제를 가지고 독일시민들을 위한 정치교육 조처들이 더 이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정치 교육의 대상을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확대·실행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방정치교육원이 핵심적 주제로 다뤄왔던 것들은 이주민과 독일시민 사이의 화합과 통합, 복지국가와 복지 시장 경제의 미래 그리고 독일사회에서의 폭력성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치교육원은 교육 핵심 그룹을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젊은 층을 주 타겟으로 생각하였다. 교육원은 그들을 위해 음악, 청소년 문화, 캠페인, 이벤트와 같이 쉽고 재미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청소년들을 위한 잡지나 다이어리 그리고 웹사이트를 개발하였고, 교육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었던 온라인 프로그램들 확대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문제들에 쉽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역사적 주제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들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www.chronik-der-mauer.de, www.chotzen.de 등이 그것이다.

2005년에 개설된 www.eurotopics.net은 날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정치조직이나 정치적 과정, 국회, 유럽의회 등의 활동 등을 수록함으로써 독일 청소년들이 유럽통합 이후 유럽시민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일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폭력과 구 동구 지역에서의 극우주의는 독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2010년 5월 제정된 연방 정치교육원법은 민주적 참여의 확대와 구 동구지역에서 발생하는 극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업무적이며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처들은 2013년까지 계속된다.

<표 1> 연방정치교육원의 중점 교육 내용

시대별	연방정치교육원 중점 교육 내용
1950년대	나치주의 청산,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한 민주주의식 함양, 독일 연방정부 건설과 운용
1960년대	공산주의-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계몽,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리, 사회변혁
1970년대	경제문제, 동방정책, 테러리즘, 정치교육의 교과목과 교수법 개발
1980년대	환경문제, 평화·안보문제, 신사회운동
1990년대	사회주의 청산, 동서독 화합 및 동독인의 체제적응, 유럽통합, 극우주의, 신기술 및 세계화
2000년대	지식정보사회, 이슬람문화 이해, 뉴테러리즘, 극우와 폭력, 청소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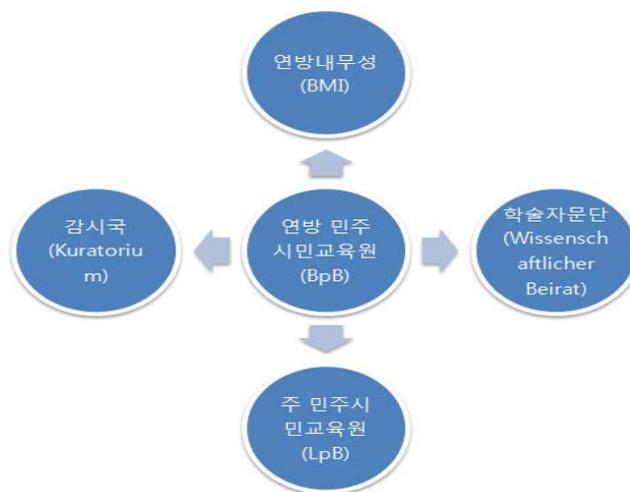
(6)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

연방정치교육원은 여·야 합의에 의해 초당적으로 설립된 연방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이며, 1952년 이래로 연방정치교육원 본부는 본에 있다. 정치교육원은 1991년에 독일연방 수도인 베를린에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새롭게 만들었고, 업무부서 미디어가 그곳에 있다. 2010년 본부를 베를린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2001년 “더 현대적인 국가-더 현대적인 행정”이라는 모토 하에 독일 연방 내무성을 주도로 모든 정부부처의 조직적 업무적 개편에 따라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같은 해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원법(Erlass üb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개정함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원장과 부원장으로 이루어진 사무처 외에 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학술자문단(wissenschaftlichen Beirat)과 22명의 연방하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Kuratorium)를 두고 있다.

감독위원회는 업무의 정치적 중립과 영향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매년 업무의 예산안, 계획서, 활동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Land)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각주의 해당 최고 관청들과 합의하고, 나아가 16개 주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치교육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3> 연방정치교육원의 대내외 협력관계구조



2001년 정치교육원법이 개정되면서 조직구도도 기존의 ‘1부 6분과’의 조직이 ‘1부 1전문국 4프로젝트팀’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다 정치교육원은 연방 행정성의 권고에 따라서 2006년 8개의 분과와 5개의 담당부서를 가진 총무행정부(Abteilung Z) 그리고 ‘스텝지원 커뮤니케이션(Stabstelle Kommunikation)’으로 개편되었다.

총무행정부(Abteilung Z, Zentrale Aufgaben)은 정치교육원의 인사, 조직, 재무, 내부관리 그리고 IT 등 과제를 수행하며, 8개의 분과와 업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8개의 분과는 다음과 같다. 분과A는 기초사업(Grundsatz), 분과B는 행사(Veranstaltung), 분과C는 연수와 교수법(Fortbildung, Didaktik), 분과D는 출판(Print), 분과E는 멀티미디어, 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센터 베를린

(Multimedia, Medien-und Kommunikationszentrum Berlin), 분과F는 지원(Förderung), 분과H는 정치소외그룹지원(Politikferne Zielgruppen), 분과I는 극단주의와 참여를 통한 협력 감독(Extremismus, Regiestelle Zusammenhalt durch Teilhabe)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분과의 업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과A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주 업무이다. 특히 정치교육에 중요한 사회변화에 대한 초기관찰을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토론과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분과B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주제들에 대한 토론, 세미나, 발표 등을 담당한다. 또한 특별한 교육 대상들을 위한 교육방법, 정치참여 프로젝트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분과C는 정치교육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이나 단체들을 파트너로 간주하고 그들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정치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 사이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시대적 세대적 정치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분과D는 정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출판한다. 지금까지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출간했던 간행물들과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들을 계획하고 출판한다.

분과 E는 모든 멀티미디어 생산물들에 책임을 진다. 이것은 멀티미디어 생산물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방송 그리고 정치교육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미디어 연구 센터를 포함한다.

분과F는 정치교육에 필요한 프로젝트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현재 성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400여 개의 단체들에 대해 조언과 세미나 그리고 토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분과H는 정치교육에서 떨어져 있는 계층 출신의 젊은 층에게 정치교육을 지원한다. 거기에는 이주민들도 포함되는데, 그들을 위해 쉽게 정치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분과I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 정치주의에 맞선다. 그들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세계관들을 연구하고 가능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조치들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스텝지원 커뮤니케이션(Stabstelle Kommunikation)은 모든 언론과 공공성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마케팅, 모금활동 그리고 내부적 의사소통이 주된 업무이다.

(7) 연방정치교육원 주요사업

연방정치교육원은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사업’, ‘출판간행물을 위한 교육사업’, ‘학교의 정치교육 및 학술지원’, ‘학교 내 정치교육 지원’,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등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정치,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관련된 주제를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민이 정치적인 정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신두철 2005, 53).

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문이나 잡지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정치교육 관련 서적의 발간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Das Parlament”와 같은 주간신문은 1952년부터 2000년까지 연방정치교육원이 발간하였다가 2001년부터 연방 하원 의회에서 발간한다. 지금은 “Das Parlament”와 같은 성격의 주간지인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간하고 있다. 주간지의 내용은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 주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럽의회 등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사안이나 정치, 경제문제 등

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 사업 분야는 연방정치교육원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부터 연방정치교육원은 학교 밖에서의 정치교육을 중시하여 이에 필요한 교재 및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교육 관련서적의 발행과 판매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서적들이 발간될 수 있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연방정치교육원이 발간한 출판물 목록과 판매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2008~9년 연방정치교육원의 출판물 목록과 판매부수

출판형태	출판물명	발행회수	발행부수
정기간행물	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정치교육을 위한 정보)	14	800.000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주간지)	79	80.000
	fluter	8	250.000
	Timer(학생용 캘린더)	2	310.000
시리즈물	Schriftenreihe	130	5.500
	Zeitbilder	2	17.000
	Themenblätter im Unterricht	19	30.000
	Themen und Material	10	11.000
	Schulstunde als Talkshow	4	4.500
	pocket	3	100.000
	Filmhefte	4	5.000
	HanisauLand Comic	2	23.000
	Thema im Unterricht	3	200.000
	Themenblätter für die Grundschule	1	100.000
	Kartenspiele	2	20.000

출처: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www.bpb.de), 2012년 7월 15일 검색

둘째, 정치교육관련 학술대회의 지원사업이다. 토론 및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의 포럼과 성인정치교육 행사지원,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성인교육 담당자와 교사를 위한 재교육 차원의 각종 세미나, 성인정치교육 세미나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료 출간, 현지답사 등을 포함한다.

2008년과 2009년 연방정치교육원의 대표적 지원사업 중에 하나는 ‘정치교육을 위한 전문학술회의(Fachtagungen zur politischen Bildung)’이다. 이러한 학술회의의 주제는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스포츠에서 극우주의’, ‘여성문제’, ‘다문화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연방방위군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군인 업무와 국제사회에서 연방방위군의 위상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정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외부 정치교육 단체 지원은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정치교육 기관, 장학재단 그리고 노동조합 등에 제정지원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약 400여 개의 조직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간 3,700여 건의 세미나와 220,0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2008년과 2009년에 1천 8백만 유로를 238개의 프로젝트에 제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비용은 연방내무성을 통해 연방예산으로 책정된다. 지원대상은 연방정치교육원에 의해 성인정치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은 단체이다.

지원조건은 교육행사의 수행이 일반수준의 성인정치교육의 교수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어야 하며, 의사교환의 세미나에서는 정치 교육적 차원의 주제들이 실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정치교육단체지원에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정당관련 재단들의 지원활동도 포함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중에 하나는 현지답사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현지답사로는 과거 나치의 만행을 체험하고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매년 이스라엘 수학여행을 주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버트 보

취 재단과 협력하여 중유럽과 남동유럽의 젊은이들에 대한 교환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8) 예산

2012년 현재 연방정치교육원에는 약 200명의 직원과 예산규모는 총 3천 5백만 유로(약 520억 원)이다(bpb 2012). 예산은 연방내무성을 통해 연방예산으로 책정·지원된다. 예산규모는 2008년 3천 7백 9십만 유로, 2009년 예산은 3천 8백 4십만 유로에 비하면 소폭 감소하였다. 그 중 업무에 배당된 액수는 2008년 67.5%, 2009년은 66.4%, 2012년 66%이다.

하지만 연방정치교육원 예산 안에는 추가적으로 연방정부의 다른 부처 예산으로부터 2008년에 1백 8십만 유로, 2009년에 8십만 유로를 지원을 받았는데, 가족, 노인, 부인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연방성(BMFSFJ), 연방내무성(BMI) 그리고 연방법무성(BMJ)이 그것이다. 그리고 수입 사업을 통해 2008년 4백 8십만 유로, 2009년에 4백 4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표 3> 연방정치교육원 예산

(단위: 백만 유로)

예산내역	2008년	2009년	2012년
사업비	25.6	25.5	24.0
인건비	9.4	9.6	8.0
운영비 (투자과 정보기술비 포함)	2.9	3.3	3.0

출처: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www.bpb.de), 2012년 7월 15일 검색

수입의 가장 커다란 재원은 출판물 통해서이다. 또한 2003년 이후부터 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입을 얻게 되기도 했다.

개별 사업 간의 지출 폭은 최근 들어 변화하기 시작했다. 행사진행에 필

요한 지출이 증가했다. 이것은 가족, 노인, 부인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연방성(BMFSFJ)이 재정지원을 하는 청소년 참여 캠페인 ‘베를린08’과 청소년 축제인 ‘자유극장에서의 정치(Politik im Freien Theater)’ 때문이다.

지출에 많은 부분은 정치교육에 관한 출판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멀티미디어 개발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수입과 지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방정치교육원 사업항목별 수입과 지출

(단위: 백만 유로)

항목	2008		2009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출판물 (발송료 포함)	11.4	4.1	10.3	3.7
온라인과 멀티미디어	3.3	0.1	4.3	0.2
교육기관지원	6.7		6.5	
기타	1.5		1.2	
총계	32.2	4.8	30.7	4.4
추가지원금		1.8		0.8
합	25.6		25.5	

출처: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www.bpb.de), 2012년 7월 15일 검색

(9) 연방정치교육원 감독위원회

(Kuratorium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연방하원의회의 의장은 재임 기간 중에 하원의원 중에서 22명을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감독위원회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정당적 중립을 지키는지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감독한다. 정치교육원은 감독

위원회에게 예산에 대한 정보, 기획, 활동 그리고 전체 출판물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내무위원회는 일 년에 2-3회 열리는 감독위원회 회의를 조직하고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연방정치교육원 원장과 연방내무성 장관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연방정치교육원 이사회는 정치교육원의 의미 있는 제안, 연방정치교육원 학술자문단의 제안이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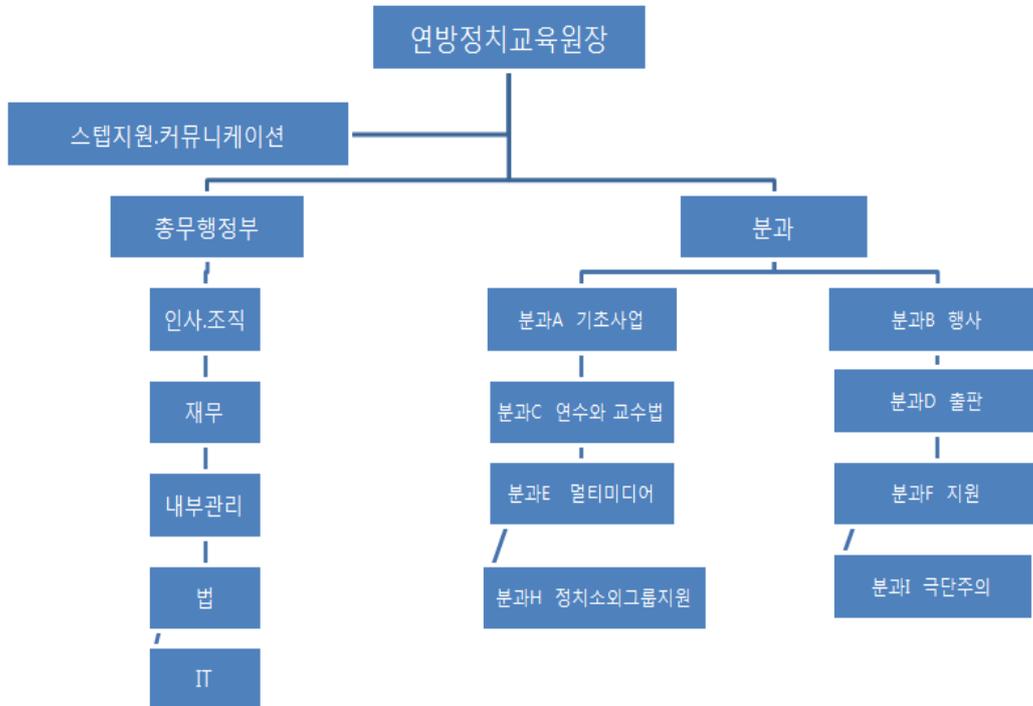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지역사무소에 소위 ‘연방정치교육원 교육코너(bpb-Bildungsecken)’를 설치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 임명기간은 다음 선거까지이다.

(10) 연방정치교육원 학술자문단

연방정치교육원 학술자문단은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을 임기로 하고 4년 중임할 수 있다. 학술자문단은 정치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과업들에 대해 자문을 한다. 자문단은 연방정치교육원은 물론 연방내무성 그리고 감독위원회에 사업 제안과 입장을 제공한다. 학술자문단은 최소한 일 년에 두 번 회의를 하며 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내무성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현재 학술자문단 구성원은 정치교육 방법론 전문가, 정치학, 역사학, 경제학 그리고 미디어와 방송학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연방정치교육원 기구표



출처: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www.bpb.de), 2012년 7월 20일 검색

나) 독일정치재단

(1) 역사적 발전

현재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한 정당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6개의 정치재단이 존재한다. 사회민주당(SPD)과 밀접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밀접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기독교사회연합(CSU)과 밀접한 한스 자이델 재단(HSS), 자유민주당(FDP)에 밀접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S), 녹색당(Bündnis grüne)과 밀접한 하인리히 뵐 재단(HBS) 그리고 2000년에 좌파연합(FDS)과 밀접한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LS)이 새롭게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표 6〉 독일 정치재단

정치재단	정당	형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회민주당(SPD)	협회(Verein)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기독민주연합(CDU)	협회(Verein)
한스 자이델 재단	기독사회연합(CSU)	협회(Verein)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자유민주당(FDP)	재단(Stiftung)
하인리히 뵐 재단	녹색당(grüne)	협회(Verein)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좌파연합(FDS)	협회(Verein)

6개의 정치재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재단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 독일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사회민주주의자였던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뜻에 따라 1925년 설립되었다. 그 후 1933년 권력을 잡은 나치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에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에버트 재단을 모델로 하여 1958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설립되었다. 1964년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설립되었지만 그 기원은 1955년에 건립된 ‘기독 민주 교육 사업회(Gesellschaft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Bildungsarbeit)’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1967년 한스 자이델 재단, 1996년 하인리히 뵐 재단 그리고 가장 늦게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 설립되었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베를린으로 옮긴 이후에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본에 있는 상트 아우구스틴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두 재단은 베를린에 새로운 재단 대표부를 세우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001년 그들의 중요한 정치와 관련된 업무를 베를린으로

이관하였다. 한스 자이텔 재단은 본부를 뮌헨에 두고 있고, 베를린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하인리히 뵐 재단과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건립부터 자신의 재단 본부를 베를린에 두고 있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1999년 재단본부를 쾨니히스뵤터로부터 베를린으로 옮긴 상황이다.

(2) 정치 재단 조직

6개의 조직이 자신의 이름에 ‘재단(Stiftung)’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만이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개인의 기부(Stiftung)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나머지 5개의 정치 재단은 그들의 법적 조직형식은 ‘등록협회(eingetragene Vereine)’이다.

각 재단은 조직의 정상에 지도위원회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들은 조직을 구성한 협회 회원들의 전체 회의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전체 협회 회원은 정관에 의해 제한되며 약 40명에서 100명 정도이다. 물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특별한 법적 지위 때문에 회원 전체 회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회 임원 구성은 정치 재단과 밀접한 정당의 회원들이 다수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회의원, 전, 현직 정부인사, 당이사회 임원 등이 모든 기관을 맡고 있다. 정당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정치가들은 정치 재단에서 정당과 비교할 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아데나워 재단 이사회를 예로 들면, 전직 정치인 9인 이외에도 독일연방수상, 독일 및 유럽의회 의장, 독일연방하원 원내총부, 각 연방 주총리, 국회의원, 당이사회 임원 등 현, 전직 정치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사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회계 1인, 사무총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 정기적 모임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비정기 모임을 가진다(Kraft, 2008, 411).

그 외에도 이사회는 다양한 그룹이나 공인들이 포함된다. 정당 재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의 구성원들, 협회나 기업, 학자, 언론인 그리고 예술가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정치 재단과 정당

독일 정치 재단은 자신과 밀접한 정치 정당의 근본가치에 정향되어 있다. 이것은 공공연한 것이며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86년 정치 재단의 공적 재정에 관한 판결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 재단은 정당과 재정적, 조직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명확하게 하였다. 따라서 정치 재단은 자신과 밀접한 정당을 위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 지원이나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두철 2009).

정치 재단의 교육업무는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학술적 출판물들과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 재단과 정당과의 관계는 두 개의 대립적인 요소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정치적 밀접성(Nähe)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성이다.

광범위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정당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업무의 법적인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경제적 요구는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정치재단법). 1999년 5개의 정치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편적인 규정들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공동성명(Gemeinsame Erklärung)”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그들의 민주주의적-정치적 자기이해, 그들의 과제와 사회적 위치가 명시되었고, 특히 국가의 재정 지원 관점에서 그들의 업무수행과 공적인 투명성 그리고 재정 사용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이견에 합의하였다.

(4) 정치 재단의 과제와 업무

6개의 독일 정치 재단은 국내외 업무 범위와 행동영역에 관한 규약을 정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조와 방식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정치 재단은 독일 안에서는 크게 3가지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치교육, 장학사업 그리고 학술연구가 그것이며 국외사업으로는 제3세계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 업무와 다른 국가에서의 활동이다.

두 개의 거대한 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국내외를 통틀어 약 56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의 작은 정치 재단인 한스 자이델 재단, 하인리히 뵐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약 150명에서 250명 그리고 가장 작은 정치재단인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약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가) 정치교육

독일 정치 재단이 국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다. 정치 재단은 정치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시민대학(Heimvolkshochschule)에서 정규적인 정치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독일 정치 재단은 정치교육에 관한 생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그들은 정치교육의 과제를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들의 책임성 강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능동적 참여에 대한 준비와 자각”, “복잡해진 세계 속에서 정치 문화에 기여” (FES-Jahresbericht 1990: 36),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참여를 위한 자극과 능력을 고양하고 현실적 지식을 매개로 하여 지역, 지방, 연방 그리고 유럽 수준의 정치에 관심을 높이는 것” (HSS-Jahresbericht 2011)으로 보고 있다.

세미나와 그 밖에 다른 행사들은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정치적 능력과 확실성” (FNS-Jahresbericht 2011)과 “정치과정에서 사실과 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 (KAS-Jahresbericht 2011)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 재단의 행사형식은 하루, 주말, 혹은 일주일간의 세미나로부터 강연, 토론, 발표 그리고 도서 및 잡지 출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두 개의 거대한 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001년 다양한 방식의 행사, 세미나, 토론, 강연 등을 약 3,000회 정도 진행하였고, 정치교육에 흥미를 가진 참가자만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나) 장학사업

6개 정치 재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다른 중요한 업무는 장학사업이다. 정치 재단이 수행하는 장학사업 방식은 여타 다른 장학 재단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 재단은 기본적으로 학문 후속 세대의 모든 영역을 지원하며,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외국학생의 장학을 지원한다. 정치 재단은 장학사업을 통해 두 개의 목적을 추구한다.

하나는 개인적이며 학술적으로 질 높은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이며 이러한 사업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 후속 세대의 지원은 독일이 법치국가와 사회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HSS-Jahresbericht 2011).

다른 하나는 외국 학생 장학 사업에 관련된 것이다. 외국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은 그들이 자신의 학업을 마친 후 그들의 국가에서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경제, 학계 혹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FES 2011).

장학생 선발은 각 재단의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장학사업은 경제적 지원 이외에 소위 이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그것은 추수지도, 즉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세미나나 혹은 조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1년에 두 개의 거대한 정치 재단은 약 1,700명의 학생을 지원하였고, 그중 약 20%는 외국 학생이었다. 3개의 작은 정치 재단은 연간 약 400-50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다) 연구와 정책 조언 사업

정치 재단의 다른 업무는 정치학과 사회학 연구이다. 2000년 구조조정이 있기까지 오랫동안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업무 중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부분이 연구와 정책조언 사업이었다.

모든 정치 재단에 있어서 연구는 다양한 정치 영역을 포괄하였고, 다른 연구 분야와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정치 재단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거나 위탁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 연구 결과는 출판하게 된다. 재단의 지원을 받거나 위탁된 연구물들은 학술회의, 토론, 발표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정치 재단은 자신의 문서보관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역사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 문서보관소”(Archiv der sozialen Demokratie)를 운영하고 노동운동사에 관한 광범위한 도서를 보관하고 있다.

(라) 국제협력

정치 재단은 국제 협력을 위해 해당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각각의 정치 재단은 이러한 담당부서에 상이한 이름을 부여했지만, 부서의 조직 구성이나 업무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정치 재단의 국제 협력 업무는 제3 세계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밖에 다른 나라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독일 연방 경제협력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는 1973년에 ‘독일 정부와 정치 재단 사이의 정치발전적(3세계 지원) 공동 업무에 관한 원칙’(Grundsätze für die entwicklungspolitische Zusammenarbeit zwischen der Bundesregierung und den politische Stiftungen)을 정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원칙은 유효하다.

그 안에는 독일 정치 재단이 독일 발전도상국지원정책 내에서 자신의 과

업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정치재단은 발전도상국 내에 파트너를 지원한다. 파트너는 미국의 인권선언문을 통해 규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에 기여하려는 조직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모국의 사회정의를 실현, 정치적 참여의 확대, 경제적 독립성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개인이나 그룹은 자기책임성과 자기 주도성이 높아지게 된다. 동시에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조직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중요한 정치 재단의 중요한 업무이다.”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2011).

정치재단의 프로젝트들은 규정상 파트너조직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의 의미는 정치재단이 발전도상국에서 자신의 파트너를 찾았을 때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파트너는 규정상 목적구속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최소한 구조적 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2011).

파트너는 정당, 노동조합, 지방노동조직, 경영자단체, 청소년과 여성 단체, 농민단체, 협동조합 그리고 다른 자립적 조직들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는 사적 공적 기관, 성인교육 기관, 미디어 영역 안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시설 그리고 사회사업단체들과 같은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들과의 협력은 정치재단 업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Kress 2008).

정치재단은 그들의 사회정치적 업무에 있어서 개별적 그룹이나 정치적 흐름 혹은 행동들에 대해 지원과 촉진을 하지만, 공식적 국가 기관과의 협력 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 70-80년대 정치재단의 주요사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 정치재단의 예산

독일 내 6개 정치재단은 연방정부로부터 1년에 약 3억 5천만 유로(한화로 약 6,060억) 정도의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총액은 모든 정치재단과 연방정부, 의회의 합의에 의해 각 정치재단에 분배되는데 야당 측 재단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분배과정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Kraft 2008).

정부지원 총액은 모든 정치재단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기초 지원금과 인접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 지원금으로 나뉜다.

이 중 비례지원금은 지난 4전의 총선 결과(후보를 선출하는 제1표가 아니라 정당을 선출하는 제2표를 기준으로 함)에서 인접 정당이 평균 어느 정도의 지지도를 얻었느냐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는 1년마다 각 정치재단의 대표와 의회의 예산 위원회 대표, 내무부 내 담당 부서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회의에서 재정과 관련된 상세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며 재단활동의 근본적 사안들 또한 논의되게 된다.

3억 5천만 유로 연간 지원 총액 중 1억 8천만 유로는 연방개발협력부(Bundesministerium für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에서 지원되며, 이는 재단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제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정치재단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데 있어 특정한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며 한 정치재단이 지원받은 금액은 다른 단체로 이전될 수 없다. 정치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정치재단은 정당에 대해 법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개방성과 정당에 대한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6년 판결문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는데, 정치재단은 재단 활동을 함에 있어 각 정당과

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접 정당의 당수, 사무총장, 회계는 정치재단 내에서 같은 직위를 수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독일 정치재단은 독일의회 정당의 인정을 받고 독립적 구조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독일 정치재단의 재정조달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신두철 2009, 93).

첫째, 연방 내무부의 일반지원은 정치재단의 기초시설 구비에 사용되어야 한다(건축 및 설비비용, 인사 비용, 정치교육관련기구설치 비용 등).

둘째, 기타 정부부서의 목적구속적 프로젝트 지원, 외무부와 연방개별협력부의 국제협력 지원, 교육학술부의 대학생 장학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들 세 개 부처의 지원내역을 살펴볼 때 이들 지원규모는 이미 정치재단이 아닌 연방정부의 부처 내에서 사전 결정된다. 각 지원금은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재단 임의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셋째, 몇몇 연방주의 경우, 지역 교육사무소(교육전담 기관)가 기타 정부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정치재단은 이러한 정부지원 이외에도 재단 자체 수입(기부금, 회비, 상속 및 양도재산, 재단자산)을 높여 재정 구조를 강화 한다.

정치재단의 예산 운용은 매년 회계보고를 거쳐야 하며, 정기적으로 연방 감사원(Rechnungshof)의 감사를 받는다. 또한 정치재단은 매년 재단의 연례보고서(Jahresbericht) 및 연방정보지(Bundesanzeiger)를 통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에 공개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5) 독일 정치재단의 공동합의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스 자이텔 재단 그리고 하인리히 뵐 재단은 정치 재단으로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임무수행과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 정치 재단은 공동 목적과 의무를 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각 정치 재단은

1998년 12월 카텐압비아에 있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유럽 회의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상의를 하였다. 결국 모든 정치재단은 정치재단으로서 공동 임무의 중요한 원칙들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 날 합의된 정치 재단들의 공동된 기본 정신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문위원회 위원장이며 전 연방대통령이었던 로만 헤어초크(Roman Herzog)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정치재단의 항구적이고 본연의 과제는 결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그것은 단지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보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교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가) 설립의 역사

1952년 기독교민주연합(CDU) 정치인들은 기독교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기독교민주연합 기독교 노동계 대표인 헤르만 에러스가 참여하였다.

1953년에서 55년 사이 당시 연방수상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워가 참가하여 기독교민주연합 연방이사회에서 정치적 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 설립에 대해 토론하였고, 55년 12월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전신인 ‘기독교민주교육 사업회(Gesellschaft für christlich-demokratie Bildungsarbeit)’를 본에 건립하였다. 1958년 4월에 기독교민주교육 사업회는 ‘정치아카데미 아이히홀쯔(Politische Akademie Eichholz)’로 조직을 바꾸었다.

1962년 정치아카데미는 ‘국제단결을 위한 협회(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olidarität)’를 건립하였다. 1964년 정치아카데미는 ‘정치교육과 장학사업을 위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까지 독일에서 가장 큰 정치재단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나) 소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내에 두 개의 교육 센터와 16개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활동 중이고, 해외에는 120개 외국 사무소에서 연간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본에 있는 상트 아구스틴에 본부를 두고 있고, 1998년 베를린에 새롭게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재단은 국내외적으로 평화, 자유 그리고 정의를 위한 정치 교육을 실천하며, 민주주의 확립, 유럽통합의 지원, 개발도상 국가와 협력 강화를 우선으로 한다.

재단은 씽크 탱크와 컨설팅을 하는 기관으로 현재 정치 활동에 대한 학문적 근거와 현실적 분석을 수행하며, 베를린에 있는 재단 아카데미는 정치, 경제, 교회, 사회와 학문 사이에서 미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 형태를 유지한다.

재단은 정치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미나나 토론을 진행하며, 일 년에 독일에서만 2,500여 건의 행사를 진행하고 매 년 145,000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독일뿐만 아니라 중앙 및 동부 유럽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이디어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약 8,8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지원을 한다.

재단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해마다 권위 있는 KAS문학상을 수여한다. 또한 젊은 저널리스트를 지원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1980년부터 지역저널리스트 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독일과 유럽에서 기독교 민주주의 역사를 해명하고 연구하기 위해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문서보관서(Archiv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Politik)’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와 현대 역사에 관련한 광범위한 도서와 잡지 그리고 현대적 미디어들을 소장하고 있다.

(다) 가이드라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장경제와 가치합의 개발 및 강화를 후원하다. 재단은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국제적 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세계에서 독일의 이익에 기여한다.

재단의 기본 이념은 신의 피조물로서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평등성, 다양성 그리고 결함으로 인간을 이해이다. 재단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연대를 의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요구는 독일, 유럽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 민주주의적 운동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점점 공동화되어가는 세계 안에서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의 간극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국내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점점 더 국제적 사업과 밀접하게 진행한다.

재단은 국제적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민족, 국가, 문화 그리고 가치체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 민주주의적 운동의 이념과 접목시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라) 업무

① 아카데미

베를린 아카데미는 정치, 경제, 학술 그리고 사회 사이의 대화를 모색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전국적 포럼이다. 아카데미는 심포지움, 컨퍼런스, 전문가 회의 및 전시회를 진행하며, 현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문제들을 미래의 관점에서 토론한다.

베를린 교육원은 베를린 아카데미에 속하며, 이곳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시

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② 정치 및 정책 상담

현대 기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결정과정은 학문적인 기초 하에 적용 가능한 정치 조언을 필수로 하고 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적 국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고려하여 베를린에 “정치 및 정책 상담(Politik und Beratung in Berlin)” (PuB) 부서를 설치하여 학술적 네트워크와 정치 컨설팅 전문 지식을 결합하였다.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실현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및 정책 상담” 부서는 하위부서로 국내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 국외정책 그리고 정책 컨설팅을 두고 있다.

③ 국제협력

재단은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 시장 경제 구조, 인권 실현 증진에 노력한다. 재단은 후속세대들에 대한 학교 외 교육과 성인교육을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재단은 정책 상담과 대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분산적이고, 지역적이고 지방적인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새롭게 설립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십 여 년 동안 100여 개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엘리트들과의 구축된 네트워크를 성장 발전시키고 오랫동안 지속해 온 파트너 조직과 함께 국제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 외교정책과 개발협력국과의 외교정책을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세계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 한다.

현재 재단은 약 70여 국가에 자신의 대표부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구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수많은 출판물과 행사를 통해 자신의 기독교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이념을 홍보하고 독일과 유럽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홍

보하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한국에도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콘라드 아데나워 한국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 남북한 화해·협력 과정에의 기여

다양한 NGO와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중점사항을 다루는 심포지엄과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보교류와 대화의 장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일정책과 여러 사건들을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
-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
- 동북아 외교, 안보 정책 논의

○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시민사회적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는 데의 일조

NGO와 다양한 연구기관들, 정부기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교환과 논의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한국의 정당민주주의와 시민사회적 사회구조의 강화
-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제도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민자치센터 구축에의 지원
-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재판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도움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 경제질서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연구기관과 NGO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입장을 갖는 분들과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현재 증가하는 실업률과 빈부격차,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질서를 지속적으로 논의

④ 정치교육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정치교육에 있어서 생동성과 다원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 재단에 있어서 정치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점에서 국내와 해외 모두 적용되며 활동영역의 공유는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재단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을 얻는 것과 동시에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들의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재단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에서 참여하는 시민 육성에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 정치교육은 교육기관이나 실천적 포럼보다 더 중요하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적 질서와 가치에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재단은 민주주의와 정치의 방법뿐만 아니라 ‘무엇’과 ‘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단은 단지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가치를 정향하는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전제와 목적을 제공한다.

재단은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두 곳에 교육센터를 두고 있고 16개의 교육기관에서 포럼과 대화,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고, 연간 120,000 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⑤ 학술활동 및 역사자료 보관

재단의 “학술활동 및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문서보관 (Wissenschaftliche Dienst und Archiv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Politik)” 부서의 핵심과제는 기독교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출판하는 것이다.

부서는 세부적으로 문서보관소, 출판물보관소, 미디어보관소, 도서관 그리고 현대사로 구분되며 재단의 학술적 센터이며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한

다. 부서는 강연, 회의, 출판, 전시 그리고 인터넷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역사적, 정치적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⑥ 장학 사업 및 문화

이 부서의 주요임무는 뛰어난 젊은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외 젊은이들이 정치와 경제, 학문과 미디어, 문화와 그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은 재능 있고 잠재력을 가진 독일과 외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독일의 미래와 독일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많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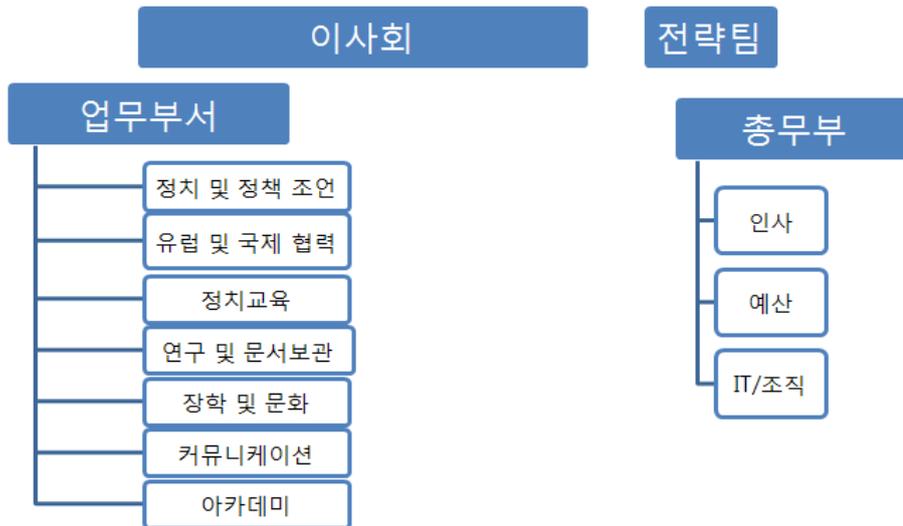
- 장학생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탁월한 능력을 가진 독일 학생들을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
-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후세대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박사과정에 대한 지원
- 자국에서 이미 학문적 성과를 보여준 외국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
- 이미 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장학생들의 네트워크 구축
- 예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마) 직원과 구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본과 베를린에 두 개의 교육 센터와 16개의 교육원이 활동 중이며, 10개의 중요부서와 총 560명의 직원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80여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120여 국가와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단의 조직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조직도



참조: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홈페이지(www.kas.de), 2012년 8월 25일 검색

(바) 재단의 예산

정치 재단은 예산의 대부분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은 재단 재원의 96.8%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2.7%는 자체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적인 기부금이 약 0.5% 차지하고 있다.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은 정부지원금의 75.6%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국내외 장학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 중 24.41%는 정치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표 7〉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2011년 예산

(단위: 천 유로)

수입		지출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정부지원	127,534	프로젝트 지원비	89,111
펀드/기부	545	인건비(국내)	27,402
참가비	1,587	운영비	9,206
그 외 수입	1,483	그 외 지출	4,037
총액	131,149	투자비	1,393
		총액	131,149

참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홈페이지(www.kas.de), 2012년 8월 25일 검색

(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가) 역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뜻에 따라 1925년 설립되었다.

낮은 계층의 수공업자 출신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 직위에 오른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에버트는 정치적 대립 속에서 겪은 뼈아픈 체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치 재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정신에 따라 모든 계층 개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교육의 진흥
- 장학 사업을 통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대학 교육 및 연구 기회 부여,

- 국제적 이해 증진과 협력에 기여(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 참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1933년 나치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1947년에 다시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1956년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시민학교를 개관하였고, 1969년에는 사회민주주의 문서보관소와 도서관을 본에 개관하였다.

재단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재단으로 개인적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적인 조직이며, 사회민주주의적 이상과 근본가치를 추구한다.

(나) 소개

사회민주주의자인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원인에 대한 고민과 생동하는 민주주의가 가장 강한 민주주의라는 인식으로 정치재단을 만들 것을 구상하였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 (Demokratie braucht Demokraten)”라는 어구를 에버트는 확신하였고, 오늘날까지 재단의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의 일부분이며 독일과 전세계 노동조합운동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 민주주의는 정의와 단결 그리고 자유를 통해 확대되고 강화된다. 사회민주주의는 모두에게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도 그러하다. 재단은 이러한 이념과 근본가치를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연결시키고 있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13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아카데미와 센터를 본과 베를린에 두고 있다. 현재 재단은 정치교육을 위한 두 개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국제적 사업과 연대의 결과 재단은 109개의 외국 사무

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과 강화라는 재단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교육, 정책조언 그리고 국제적 연대사업을 수행한다. 재단은 정치적 행동, 지식, 노동조합운동,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를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재단의 중심 관심사는 국내외 재능 있는 인재들에 대한 지원이다. 이주민, 교육과 거리가 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 출신의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재단은 교육기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에버트 재단의 사회민주주의 문서보관소와 도서관은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사적 토대와 집단적 지성을 보존하고 공개한다.

에버트 재단은 총 620명의 직원이 본과 베를린, 국내외 사무소,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약 1억 3천 7백만 유로를 예산으로 하며, 2010년에 독일에서 약 3,000회의 교육행사를 진행하였고 200,000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재단은 100여 개가 넘는 외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 2,7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그 중 외국학생은 330명이었다.

독일과 국제 노동운동 영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약 880,000 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서보관소는 독일에서 노동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

(다) 업무와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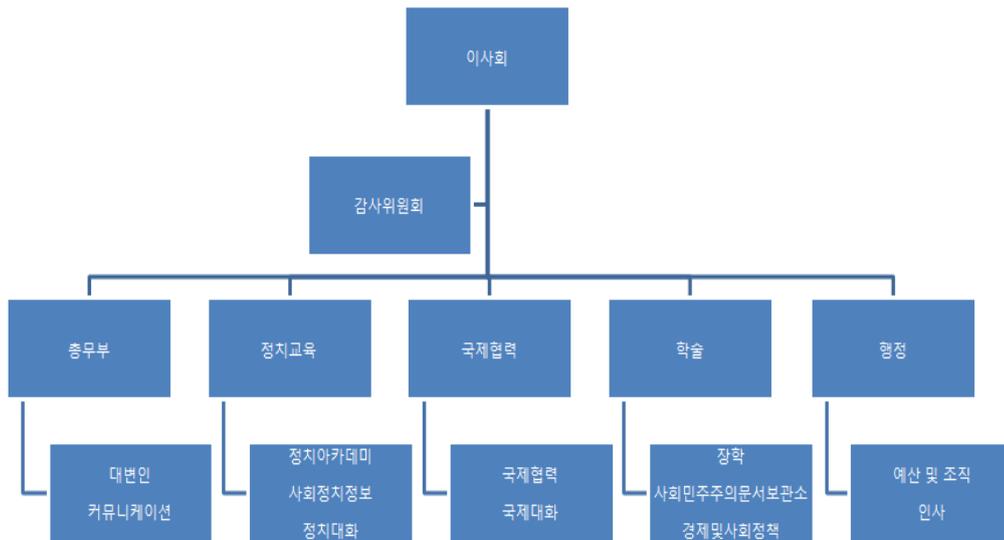
① 정치교육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정치교육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연대라는 근본가치를 토대로 사회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을 지향한다.

정치교육 사업은 3개의 부서가 담당하는데, 정치아카데미(Politische

Akademie), 사회정치정보(Gesellschaftspolitische Information) 그리고 정치대화(Politischer Dialog)가 그것이다. 부서 간 업무분장은 지역적 그리고 전문적 관할 협력하에 업무가 추진된다.

<그림 5>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조직 구조



출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www.fes.de), 2012년 8월 28일 검색

정치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이 개인적인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정치와 사회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정치,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 사회 안에서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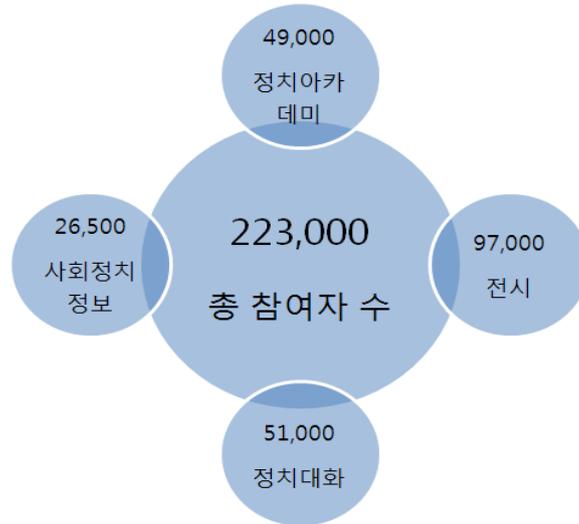
정치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4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정치중재(Politikvermittlung)’, ‘학습프로젝트(Lernprojekte)’, ‘능력향상트레이닝(Kompetenztrainings)’ 그리고 ‘정책조언(Politikberatung)’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방법론적으로 평가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방법도 추가하고 있다.

2011년 보고서에서 따르면 교육분야에 있어서 제공된 프로그램은 약

2,900 여 개가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220,000 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각 분야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분야별 참여시민 수

(단위: 명)



출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www.fes.de), 2012년 8월 28일 검색

② 장학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장학사업부는 더 많은 교육기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46명의 직원이 재능있고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학업을 하는 동안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011년에 약 2,6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그 중에서 약 270명이 외국 학생이었다. 여성은 46%였고, 50%는 2011년에 새롭게 선발하였다.

이미 장학금을 수여받았던 학생들은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만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1000여 팀이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이미 장학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 중에서 약 11,500명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Online-Who-is-Who'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니터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③ 경제 및 사회정책

경제 및 사회정책 부서(WISO)는 독일에서 경제발전과 관련되거나 사회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물음과 정치적 산물에 대해 정책적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부서는 정치가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안문제들이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부서는 이러한 토론과 연구의 성과물을 출판하는데, 하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들을 기록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담은 'WISO Diskurs'와 다른 하나는 현안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WISO direkt'이다. 이 부서가 실행하는 분석과 전문가의 평가는 공개적 행사들을 통해 발표하고, 실행가능성에 입각하여 행한 토론의 결과는 경제와 사회에 관련된 전문적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011년에 약 60여 개의 주제들이 토론되었고, 두 출판물은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부서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교환과 정책자문을 조직하고, 공개화하고 있다.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노동, 경영, 정책
- 공공서비스
- 혁신적 교류 정책
- 중산층
- 지속가능한 발전구조
- 소비정책
- 직업과 종류
- 이민과 통합
- 사회정책

④ 국제협력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국제 협력은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이다. 1960년대 재단은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노동조합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국가 정부들을 지원하였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재단은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적 사회 구조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에버트 재단의 국제협력부는 국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 개의 부서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국제대화부(Internationaler Dialog)와 국제발전협력부(Internationale Entwicklungszusammenarbeit)가 그것이다.

국제대화부는 유럽연합 국가들 안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치적, 노동조합적 그리고 시민사회적인 파트너 조직과 연대사업을 수행한다.

국제발전협력부는 3개의 기본적 전략을 가진다.

- 사회적 정의를 실현
- 미래를 위한 경제를 건설
- 자유와 평화보장의 강화

또한 국제발전협력부는 세계화문제와 민주주의의 공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세계적으로 109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를 두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음 분야의 연구 사업과 학술 회의,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논문 및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 독일 통일에 관한 경험 공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독일 통일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 통일의 성공 사례뿐 아니라 독일 통일이 지니고 있는 함정에서도 교훈을 얻고자 학계, 연구 기관 및 한국의 여러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한국 통일의 본보기로 삼을 수는 없지만 독일 통일을 최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 대화 추진 및 북한이 참여하는 신뢰 구축 활동

유럽의 비정부 기관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남북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은 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 대화와 진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따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 및 대화 프로그램뿐 아니라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간 대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또한 독일과 북한, 유럽연합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쪽의 정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과 북한의 학술 교류도 실시하고 있다.

○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및 시민의 자유 향상을 위한 한국의 시민 사회 강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을 고무시켰고, 지난 2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러 서구 유럽 국가의 민주주의에서 보듯이 민주화 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이루고 인권 및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학계 및 시민 사회의 주요 인사들과 시민단체를 지원한다.

○ ‘복지 국가의 미래’와 ‘미래 경제’에 관한 독일 및 유럽과 한국의 정세, 학계와 노동조합의 대화 제안

2008~2009년의 금융과 경제 위기 및 미국과 유로존의 지속적인 채무 위기는 경제와 재정 정책의 신자유주의 및 시장근본주의 모델이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사회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한국을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국가로 발전시키고, 혁신과 사회 정의 및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과 결합한 ‘미래의 경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화와 연구 사업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⑤ 도서관과 사회민주주의 문서보관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도서관은 약 100만 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역사학-사회학 전문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수많은 가치있는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에 관한 전문도서관이며 정치 영역에 관한 개인 소장 도서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에버트 재단 도서관은 1960년 대 말부터 독일사회민주당의 중앙당 도서관의 도서들과 켈링어 협회의 도서를 넘겨받아 보관 중에 있다.

독일 노동조합 연맹이나 대부분 독일 개별 노동조합 그리고 대규모 국제 노동조합들은 자신의 도서목록을 에버트 재단 도서관에 넘겨준다. 현재 에버트 재단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도서관이다. 장서 수집은 독일과 국제 노동운동과 사회사와 현대사에서 중심에 있던 사건들이 중심이다.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 그리고 이 영역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조직들로부터 출판되지 않은 기억들에 대해 보존하고 연구하고 밝히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문서보관소 전문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 이외에 문서보관소는 기록들을 디지털로 변환시켜 보관하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라) 재단 예산

독일연방경제협력부(BMZ)는 2010년에 프로젝트에 기반하는 사업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사회와 정치구조 발전 지원에 6천 5백 십만 유로를 지원했다.

연방내부부는 사회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분야에 3천 3백 4십만 유로와 베를린에 짓고 있는 재단 청사 건립에 3백 5십만 유로를 지원했다.

연방교육부는 독일학생들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에 천 2백만 유로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로 백 9십만 유로를 지원했다.

전체적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은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약 9백 5십만 유로 증가되었다. 2010년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8>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0년 예산

(단위: 천 유로)

수입		지출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연방정부 지원금	135,305	국제협력	77.770
지방정부 지원금	2.467	정치교육	23.073
그 외 지원금	4.758	장학사업	18.780
기부금	469	프로젝트지원	7.200
참가비	908	운영비/인건비	15.940/620
기타	3.680	기타	6.044
총액	149.427	총액	149.427

출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연간보고서 (2011, 96쪽)

제3장 스웨덴의 정당 정치교육

제3장 스웨덴의 정당 정치교육

1) 스웨덴의 정치교육 전달체계

가) 스웨덴의 정치교육 제도화 과정과 변화

(1) 스웨덴 시민교육의 역사와 제도화

스웨덴의 성인교육은 스웨덴의 교육체계가 제도화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구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1970년대 공공성인교육시스템과 학생복지개혁은 스웨덴의 자유주의적 성인학습과 자발적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전통과 연계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특유의 교육체계로 이어져왔다.

성인교육은 스웨덴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들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대중운동에서 출발하여 제도화된 자유주의 혹은 대중적 성인 교육은 빠른 성장을 보인 직업 훈련 혹은 취업 관련 성인교육과 결합해왔다. 사실 성인 교육에 대한 어떤 단일한 차원의 노르딕 모델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노르딕 국가들의 성인 교육은 시민사회에서의 매우 높은 참여율과 정부차원에서의 공공 재정비중, 공적 공급자(public suppliers)의 특징을 보이며 또한 자발적인 형태의 (자유)성인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데 공통점이 있다(Antinkainen 2006, 229).

스웨덴의 시민교육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학습 동아리 활동부터 다양한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등의 교육활동 공교육 체계에 이르기까지 중립적 연계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폭넓은 정치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웨덴 시민교육이 주목받았던 것은 지역 공동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학습동아리(Study Circle)를 통

한 평생교육활동이다. 스웨덴인은 한 명당 보통 5~6개의 단체에 속해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공동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이고 있는 평생교육활동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민 정치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웨덴의 다양한 정치, 사회, 시민 단체들은 토크빌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정치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성인 교육, 주로 코뮌(Kommun)¹⁾ 단위에서 시행되는 자유성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공교육은 정부에 의해, 자유성인교육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하에 다수의 교육협회 및 지역 단체가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 다양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스웨덴의 정규 교육과정을 살펴본 뒤 자유성인교육 전달체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웨덴의 교육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편주의적 공교육에 기반을 두고 운영된다. 공교육제도는 의무교육과 선택적 자유교육으로 나뉜다. 의무교육은 만7세부터 16세까지, 9년 과정으로 기초학교(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스웨덴 북방 소수민족인 사미족을 위한 6년제 사미학교가 의무교육에 편성되어있다. 기초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는 종합제 고등교육은 모두 3년제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유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적 자유교육 형태로는 고등학교, 지적장애인 고등학교, 특수 고등학교, 예술학교, 코뮌이 운영하는 성인학교,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 성인학교 등이 있다. 역시 공교육에 속하는 고등학교 이후의 고등교육과정에는 일반 종합대학(Universitet)과 단과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등의 전문대학,

1) 코뮌(Kommun): 스웨덴 행정 지역 기초단위. 스웨덴은 중앙-21개 광역자치단체(län)-290개의 기초자치단체(Kommun)로 구성되어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탁아,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 주택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체 조세권을 갖고 있으며 재정 수입원은 주로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 각종 서비스 수수료이다. 스웨덴의 기초자치단체는 조세권을 갖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다. 지출의 대부분은 복지와 교육이 차지하고 있다.

사회인 생활 상급 직업학교가 포함된다. 성인교육관련 학교교육체계는 지자체 성인교육(기초교육과 고등학교),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교육,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스웨덴의 성인교육체계는 다음과 같다.²⁾

- 지자체성인교육(Komvux) 사회와 노동을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 지적장애를 갖는 성인을 위한 교육(Särvux)
-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SFI)
- 상급직업교육
- 보충교육 - 특수 직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 습득
- 자유성인교육 - 목적과 운영에서 자유로운 사회 공동체 교육활동.

정부는 지원과 허가만 담당.

이 중 스웨덴 국립교육청(Skolverket)³⁾이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성인 공교육(콤복스, Komvux)은 1968년부터 본격화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콤복스는 코뮌이 운영하며 초등학교 후반부 과정부터 고등학교 전 과정까지 제공한다. 고등학교 과정 중퇴자가 나중에 대학입학을 위해 필요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거나, 학생자격을 얻고 싶을 때도 성인학교를 찾는다. 대학전공을 전환하거나 계열 필수과목을 보완할 때도 콤복스(Kombux)가 제공하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혹은 정보통신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기초 성인 교육, 고등 성인 교육, 고등과정 후 훈련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Skolverket 2011, 52).

- 기초성인교육: 모든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초성인교육 과정. 스웨덴어와 제2외국어, 수학과 사회과학 등 의무교육 졸업자격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필수 교과목 수료를 목적으로 한다.
- 고등성인교육: 의무 교육을 마친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등학

2)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www.sweden.gov.se>) 참조.

3) 의회(Riksdag)와 정부가 결정한 유치원, 의무교육 과정에 대한 지침에 따라 공교육기관에 교육법, 커리큘럼 등 이행하도록 지침 전달. 평가 수행. 정부가 자문위원회 구성(<http://www.skolverket.se>).

교 교육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고등 후 훈련프로그램(직업훈련): 고등교육을 마친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향상과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 2009년 7월 1일 이후 직업 고등 교육 학교로 조직이 개편되고 직업 고등 교육 학교의 교육 편제에 따르게 되었다.

1990년대 추가 정부 보조로 인해 성인 교육이 크게 팽창했다. 특히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고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진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교과목을 대폭 증설함에 따라 학생 수는 1990년대에 거의 두 배가 되었고 단기 코스 참여자들을 포함하면 거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성인교육은 대체로 코뮌단위에서 운영된다. 2010년에 이르러 스웨덴 내 주(län) 수준에서 성인 교육 기관은 더욱 줄어 21개 주 중 8개 주 만이 성인교육을 관할하고 있으며 성인교육은 대체로 지자체로 이전되어왔다. 성인 교육 코스를 개설하는 학교의 수는 327개이다. 2000년대 이르러 성인교육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자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학생 중 거의 2/3가 여성이며 2010년 현재 10명 중 4명이 해외 출신이다. 대체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2010년 기준 약 14% 가량이다.

이 글의 중심 주제인 스웨덴의 정치교육 전달체계와 정당정치교육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자유성인교육이다. 자유성인교육은 스웨덴 특유의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시민교육의 전통 속에서 이어져 왔다. 스웨덴의 정치교육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풀뿌리 시민교육의 전통과 이에 기반하여 정부가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지리적 위치상 북유럽 변방에 위치하여 14~15세기 백년전쟁의 영향에서 비교적 멀리 있었다. 게다가 지형적으로 산간지역의 비중이 높고 경작지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중앙집중적 왕권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지

역이 많았다(이현근 2010). 서유럽에 비해 엄격한 봉건제적 신분질서에 입각한 소유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스웨덴은 자영농의 비중이 높았고 코뮌을 기본 단위로 한 지역 자치 공동체적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다.

민주화 이전부터 스웨덴에서는 지역 기반의 대중운동이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왔다. 특히 스웨덴 노동자 코뮌과 같은 노동자계급 기반의 공동체 문화와 질서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와 같이 사민주의 블록과 비사민주의 블록 혹은 노동자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을 지지기반으로 한 스웨덴의 계급정치형태가 진행되기 이전 스웨덴 노동운동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흐름 속에서 성장해왔다.

1800년대 후반 빠르게 성장한 대중운동의 새 주류는 개신교도들에 의한 복음운동(자유교회운동)과 금주운동이었다(Therborn 1992, 12-13). 19세기 초까지 스웨덴은 인구의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830년대 이후 철광, 섬유 등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공장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870년대에 대부분의 산업부문에 급격한 팽창이 일어났으며, 1890년대 수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 산업화가 진행되었다(Koblik 1975, 92-95; Hecllo and Medsen 1970, 110). 190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농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자영농의 비중이 높았다. 독립적 자영농의 존재는 스웨덴 농민운동이 정치세력화에 성공하고 1930년대 노동자 정당인 사민당과 연합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산업화와 노동자계급의 증가로 스웨덴 노동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스웨덴 정치균열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독특한 점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자유교회운동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금주운동이 미친 영향력이 더 컸다. 1923년 금주법을 둘러싸고 자유당은 스웨덴자유당과 금지자유당으로 분당되었다가 1934년 통합되었다.

1910년 이후 대중운동의 역사는 정당, 특히 좌파 진영 내 권력 투쟁의 일부가 되었다(Lundkvist 1975, 180-196). 1910년부터 본격화된 보통

선거권 확대와 사민당의 성장으로 대중운동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민주의자들과 금주운동에 참가했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 사민주의적 교육 이념과 교육정책: 노동자 코뮌과 사민주의적 교육 정책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1900년대 초까지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와 일상적 정치 활동을 독려하고 정치 토론의 장이 되었던 것은 “노동자 코뮌”이었다. 노동자 코뮌은 대체로 스웨덴 행정 단위 상 기초 지자체를 의미하는 코뮌(kommun)을 따라 형성되었는데, 초기 스웨덴 사민당(SAP) 조직의 기초 단위가 되었던 노동위원회 지역 조직을 1901년부터 노동자 코뮌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노동자코뮌이 사민당의 지역 노동운동 단위이자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생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1900년대 초 노동자코뮌에는 해당 지역 사민당의 가입 단체들, 즉 노조 지회, 작업장분회, 여성위원회, 기독교 사회주의 단체, 청년 분회 등이 모여 있었으며 유권자들의 정치교육과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노동자 코뮌에는 SAP 지부,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자유교회운동(국교회에 반대하는 진보적 개신교 운동), 금주운동 단체 등 당대의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들까지 결합하여 지역의 정치 문화적 거점이 되었다.

스웨덴 특유의 지역생활문화공동체의 사례로 손꼽히는 “민중의 집(Folkets Hus)”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당시 지주들은 노동운동의 확산을 두려워하여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했는데 남부 스웨덴의 노동자들이

4) “민중의 집(국민의 집 혹은 인민의 집)”은 스웨덴어로 Folkets Hus로 Folket은 국민, 인민, 서민, 민중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김상열·변광수 2009. 『스웨덴-한국어사전』 참조). 여기에서 “민중의 집”은 사민당 정치가 한손(P.A.Hamsson)의 “국민의 집(Folkehemmet)” 정책과는 지칭하는 바도, 그 의미도 다르다. 한손의 “국민의 집”은 “국민의 가정(people’s home)”의 의미에 가까운 반면 여기서 “민중의 집”은 장소로서의 집(house)의 의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생활문화공동체 및 활동의 장으로 기능해온 공간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국민의 집, 민중의 집, 인민의 집 등 다양한 번역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민중의 집”으로 병기하여 잘 알려진 한손의 “국민의 집”과 혼동을 줄이고자 한다.

자유로운 회합 장소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민중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민중의 집은 1890년 크리후안스타드(Kristianstad)를 시작으로 스웨덴 남부 전역으로 확산되어갔다. 1890년 2개에서 시작하여 1900년에 22개, 1905년에 53개 그리고 1910년에는 112개로 늘어났다. 초기에는 정치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던 사민당의 노동자코뮌과 노동조합과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여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와 교육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다.

민중의 집 사업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교육 문화 활동이었다. 민중의 집에서는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ABF)의 노동자 강좌 뿐 아니라 노동조합학교나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학습모임들이 열렸고, 당과 노동조합의 잡지사, 신문사들이 입주해 있었다. 민중의 집을 거점으로 한 노동자 코뮌은 노동조합운동과 결합하여 각종 문화 행사와 이벤트를 주도했고 참여자들의 자발적 학습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졌다. 노동자 코뮌은 민중의 집에 영화관, 도서관 등을 설치하였고, 문학 강좌도 개설하였다.

2000년 1월 1일부터 민중의 집은 창립 시기부터 상호 협력 관계에 있던 시민공원 중앙회(Folkparkernas Centralorganisation, 1905년 창설)와 민중의 집 전국연합(Folkets Husföreningarnas Riksorganisation, 1932년 창설)이 합병하여 “민중의 집과 공원(Folkets Hus och Parker, (영)the People’s Parks and Community Centres)”이라는 명칭의 전국 연합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2012년 현재 125개의 시민공원과 533개 커뮤니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5,000만 명이 방문한다. 사민당을 비롯한 정당 정치와의 연계는 노동자교육협회(ABF)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업 및 활동은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생활 거점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장소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6~51년 사이 스웨덴 전반에 삶의 질의 급격한 향상과 민주적 사회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는 늦은 산업화를 거

쳤지만 전간기 전쟁의 포화에서 떨어져 있었던 스웨덴 경제 성장이 뚜렷해지면서 “수확기(harvest time)” 혹은 민주주의의 “밭아기(seed time)”로 평가받는다(Scott 1977, 525). 전후 경제안정화 계획을 시작으로 스웨덴 사민당 주도 하에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적 이상과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사민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 1880년대까지 사민당 강령과 정책 프로그램에서 교육은 주요 정치 이슈가 아니었다.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이래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자유당과 협력하여 보통선거권 획득에 매진했다(Scott 1977, 431-432). 사회개혁 정책, 특히 교육에 있어서 초기의 사민당은 자유주의자와 협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1866년 신분제의회가 철폐된 후,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대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독일식 노동자 협회(Workers' Institute)를 모델로 하여 노동자들의 사회 활동을 고취하고 계급 간 차별을 배제한 형태의 평등 교육에 대한 강연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노동자협회는 소위 숙련공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Lindensjö 1992, 308-309).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 후 베르이(Fridtjuv Berg) 등 자유당 정치인 및 초등 교육 교사들과 보통교육체계 수립을 위해 협력했다. 이러한 시도는 보수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1894년 기초학교와 문법학교 과정을 통합하는 결정을 한 이래 1905년~1909년, 1911년~1914년 자유당 정부 하에서 자유주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 기초 교육체계의 중요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1909년 문법학교를 거치지 않고 초등6년 교육을 거친 후 4년제 중등학교과정으로 진학하도록 개편안을 내놓았다. 1900년대 초 보통선거법 도입 후 선거에서 지지율 급증에 힘입어 1917년 사민당은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초등교사 출신의 사민당 소속 교육부장관 뤼덴(Värner Rydén)을 중심으로 학교 시스템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1918년 수립된 학교위원회(the Schools Commission)는 아동 교육 확대와 남녀 교육평등을 증진시키는 통합 교육을 목표로 했다. 1920년부터 일반 시민(citizenry) 교육의 근간이 되는 보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22년 학교위원

회가 6년 초등교육과 4년제 중등교육, 3년제 고등교육 체계를 통합, 연계하는 교육 시스템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1920년대에는 사민당, 자유당, 보수당 정부가 연이어 소수정부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교육개혁안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사민당은 교육개혁안을 고수했으나 보수당과 자유당 내 도시 분파, 중·고등교육기관 종사자들 대다수는 반대했다. 학교위원회의 원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되자 사민당은 농민당과 협의를 시도했다. “불충분한 합의”라고 결론지어졌지만 기초 학교 프로그램은 6년제 초등, 3년제 중등 과정이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이후에는 실용과 이론 학습라인으로 나누어지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1950년대 이후 사민당은 농민당(현 중앙당) 및 공산당과 교육정책에서 협력했다. 보수당을 비롯한 고등교육 종사자들은 우열반 조기 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중등교육 진입 이전에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제도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민당은 기회의 평등과 능력에 따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당시 노동자 출신 학생들의 중등교육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 따라 중등교육과정까지 의무화된 보통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에서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보수당 및 고등교사협회와의 갈등 끝에 결국 최종안은 절충적으로 결정되었다(Lindensjö 1992, 311-312).

1950년부터 스웨덴에 9년제 의무교육이 도입되었다. 여자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 남녀공학 의무교육(coeducational compulsory education)이 시작되었고, 1962년 현재와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과정을 가진 초등학교(grundskola) 제도가 수립되었다. 1968년에는 특별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지적 장애아들이 정규교육을 함께 받게 되었다.

스웨덴 정규 학교 교육체계 내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과 한국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사회교과 내 시민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는 스웨덴 교육은 민주적 결정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사회 교육의 최종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⁵⁾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대표들은 교사, 학부모 운영위

원 등과 함께 학교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협의하고 투표권을 행사한다.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활동 및 정당조직 활동에 법적 규제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의 통념과는 달리 스웨덴에서 민주주의적 실천은 현실 정치 활동과 결부되어 있다. 국가에 의해 중앙교육체계가 정비되기 이전부터 지역 공동체 활동이 기본적인 교육시스템의 근간이 되어온 스웨덴에서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단체(förening)나 클럽 및 그룹에 참여하거나 필요하다면 스스로 만들도록 독려 받는다. 14세 이상의 학생들은 누구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민당의 청년조직과 대학 노조 조직의 대표들은 정당과 노조 및 지역 교육협회의 리더십 교육과정과 정치활동을 거쳐 현실정치에 입문한다.

(3) 1990년대 이후 교육정책의 변화

- 1994년 스웨덴 교육 커리큘럼이 개편.
- 상대평가(norm-referenced)에서 절대평가(criterion-referenced)로 성적평가방식 전환.

2011년 학교 개혁으로 과거보다 일찍 성적평가가 시작(이전엔 9년차에 시험성적 평가가 이루어짐)되었다. 그리고 교사 교육 시스템 개편되어 2013년 각급 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정규직 취업을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스웨덴 교육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고등학교 중퇴 청년 비율이 높고 경제 불황기에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실업률 증가

5) 스웨덴의 초중등 의무교육과정 학습지도요령에는 사회과 부분 9학년 종료 시점까지 도달해야할 목표에 학교에서 민주적 일처리 방식과 민주적 결정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학년 사회과과정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단체조직(기업가연맹, 노동조합 등)에 직접 방문하고 심화학습하며 토론하고 상호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사회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민주시민 자질 양성'의 목표에 따른 교육 내용은 법, 제도적 질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 정치나 정치과정의 작동, 주요 집단에 대한 체험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75-93 참조).

의 고질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민당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등교육기관 57400여 곳을 대상으로 청년층 직업훈련과 교육, 성인 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7000만 크로나의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있다(스웨덴 사민당 홈페이지 참조).

현재 스웨덴에서는 지자체가 교육 예산 편성,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 내에서 독립학교의 수가 점차 증가해서 2010년 약 10%가량의 학교가 사립(independent schools)이다. 의무교육 학생 12%, 상급고등학교 학생의 24%가 사립학교 학생이다. 그러나 스웨덴 내에서는 여전히 학교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교육 개혁에 찬성하는 쪽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립학교보다 높은 만족도 등을 들어 사립학교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스웨덴 교육개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은 1970년대부터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교육체계가 축소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개혁은 크게 ‘글로벌화’와 ‘분산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와 교육의 효율성 증가 목표 하에 교육체계가 점차 시장수요와 대기업, 국제경제 경쟁력 수요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국의 교육 정책에 중앙정부 뿐 아니라 UN, WB, WTO, OECD, EU와 같은 초국적 기구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집합적으로 교육정책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띤다. 교육에 대한 글로벌 관점이 국가-문화(national-culture) 관점을 대체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 이어 2010년 총선에서도 집권에 실패한 스웨덴사민당은 보수당 주도 하에 구성된 중도우파정부의 교육정책이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자기성취에 도움이 되게, 사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교훈을 가르치는데 맞춰지는 대신, 정부, 산업, EU의 요구에 맞춰진다. ‘질’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 교육개혁 정책은 “개별화된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이라는 명칭 뒤에 신자유주

의 아젠다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분산화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통일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각급 학교로 점차 분산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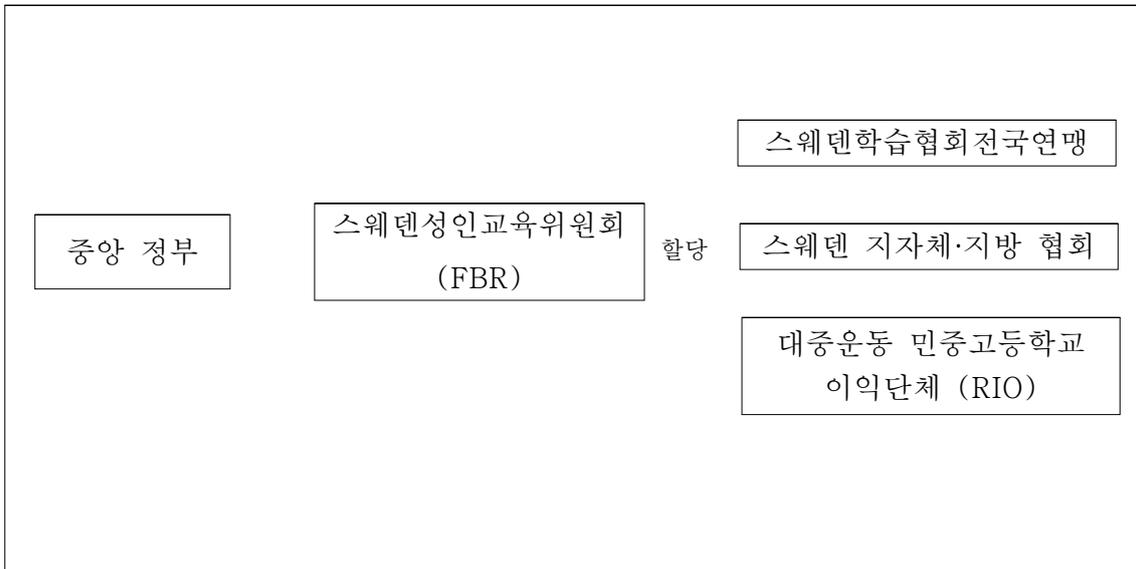
현재 스웨덴의 교육 예산과 재정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사립학교 수 증가, 바우처 시스템 도입 등의 시도는 각 학교에 더 많은 책임과 더 적은 자금 지원의 결과를 낳았다. 분산화가 각 학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각 학교에는 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학교 간 경쟁이 증가하고 교사의 교과개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994년 개혁으로 각 학생의 잠재력 고려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개혁은 스웨덴 교육체계를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극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사회민주주의적 교육의 의미가 흔들리고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하는 압력을 느끼고 교사들은 국가에서 정한 목표와 기준에 어떻게 도달해야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중도우파 정부의 교육 개혁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교육이 생산 속에 투자될 수 있고 경제 이윤을 전환될 수 있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관점에서 접근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Nelly Pourgheli 2008. <http://politicslilithazine.com>).

나) 스웨덴 정치교육 제도와 특징

(1) 스웨덴의 정치교육 협력체계

스웨덴의 정치교육을 단일한 제도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주로 자유성인교육체계 내에서 학습협회와 다양한 비영리단체, 대중운동조직, 노동조합, 정당들이 협력 하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스웨덴의 자유성인교육 협력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스웨덴 자유성인교육 협력체계



자유성인교육협력체계 속에서 스웨덴 정부가 하는 역할은 가이드라인 제시와 보조금 지원이다. 정부는 민주주의 강화와 사회발전 참여라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비영리 대중 조직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중앙정부에서 책정된 보조금은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FBR)를 거쳐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민중고등학교(folkhögskola), 단체, 학습협회를 총괄하는 3개 전국조직에 할당된다. 따라서 성인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만 정부 통제에서 자유롭고 내용과 형식 면에서 독립적이다.

스웨덴의 자유성인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들은 크게 3개의 전국단위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 학습협회전국연맹, 스웨덴 지자체·지방협회, 대중운동 민중고등학교⁶⁾ 이익단체가 그것으로, 150개 민중고등학교와 10개의 학습협회가 포함되어있다.

6) 북유럽 특유의 민간고등교육기관인 folkhögskola는 국내에서 민중고등학교, 시민고등학교 혹은 국민고등학교로 번역된다. 이 글에서는 민중고등학교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이 아니고, 앞서 folkets hus를 “민중의 집”으로 번역한 것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민중고등학교로 번역했다. 노르웨이,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에 특징적인 교육기관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지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독립 고등교육기관이다.

◎ 스웨덴 학습(교육)협회전국연맹

10개의 전국단위 학습(교육)협회는 목적과 지향이 다양하다. 각 협회는 중앙행정사무소와 다수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들은 일반적으로 대중운동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참가자의 경험, 경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된다.

학습협회는 학습동아리뿐 아니라 광범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문화기관이 없는 250개 지자체에서 특히 광범위한 지역 문화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 민중고등학교(folkhögskola)⁷⁾

민중고등학교는 정부 교과과정과 독립적인 자체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필요와 개별적 경험, 지식에 맞추어 특화 교육을 담당한다. 2012년 현재 150개 민중고등학교 중 100개교 이상이 대중운동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40개교가 주위원회 관할 하에 있고 1개교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18세 이상 48세 이하 성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18세 이하 학생의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입학가능하다. 이민자의 경우 기본적 수준 이상의 스웨덴어가 요구된다.

스웨덴의 정규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학비는 무료이나 교재비와 식비, 기숙사비는 유료이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생보조중앙위원회(CSN, Centrala studiestödsnämnden)를 통해 정부 용자나 보조를 받아 충당한다.

민중고등학교는 정규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지원형태, 교육 과정과 내용은 학교마다 상이하다.

7) <http://www.folkhogskola.nu> 참조

교육과정은 코스별로

- 일반코스(Allmän kurs/Behörighetsgivande kurs)
- 특별코스(Profilkurser)
- 직업훈련코스(Yrkesutbildningar)로 분류된다.

교육내용은 비즈니스&경영, ICT, 국제, 인문, 건강,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다양하며 각 코스들은 1학기~3학기, 1년 등 다양한 기간으로 운영된다. 2005년 봄 학기 기준으로 민중고등학교 등록 학생 중 대학졸업자가 27%, 김나지움 졸업자가 61%를 넘는 등 성인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춰 프로젝트 기반 학제 간 교육형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교 형태는 기숙사학교와 통학학교가 있다.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원거리학습코스(distanskurser)가 개설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일반 민주주의 시민교육과 스웨덴 주요 정당들과 협력 하에 다양한 형태의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교육협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 노동자교육협회(ABF, Arbetarnas bildningsförbund)

(영)(WEA, 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of Sweden)

- 1912년 9월 16일 사민당, LO, 협동조합 공동으로 창설.
- 정부, 정당, 노동조합, 의회, 정부 위원회 등과 협력
- 스웨덴 전 지자체(kommune)에 성인교육 및 시민정치교육 담당
- IFWEA(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유럽지부인 Euro-WEA, Nordic-WEA 가입

노동자교육협회(ABF)는 사민당, 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협동조합 등과 정부 및 정부 위원회와 의회의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매년 750,000명의 스웨덴인이 ABF 동아리나 강좌에 참여하며 700,000명이 강연을 듣고

2백만 명이 음악과 드라마 활동에 참여한다.

일반 노동자 계층에게 보통 교육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기초 학습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의 지역 시민교육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원을 1800년대 말 지역의 부녀자들이 초롱불을 들고 마을을 오가며 야간 독서회를 운영하는데 두기도 한다(변광수 2009). ABF 창설에는 사민당과 노동조합, 지역협동조합의 역할이 컸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했는데 그 중심에 노동운동, 금주운동, 자유교회운동(frikyrkorörelsen)이 있었다. 대중 운동들이 교육의 대안적 전통-성인 교육-을 형성했다. 대중 교육의 전형은 참여가 자유롭고 자발적이라는 것과 지식이 사람과 사람에 의해 형성되고 확산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들의 상황과 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는 아이디어였다.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이고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구 다수는 6년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성인 교육이 변화하면서 보다 더 많이 읽고, 토론하고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사람들 스스로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상응하게 교육 내용을 만들고 공급과 수요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1912년 ABF가 세워졌을 때 이미 성인 교육 전통은 시작되고 있었다. 일찍이 명망 있는 작가, 학자, 연설가 등을 내세워 스웨덴 전역을 순회하는 강연이 인기리에 진행되어왔다. 중요한 활동은 1800년대 말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공공도서관 건립이었다. 처음에는 학습 동아리(Study Circle)가 성인교육 형태 중 가장 덜 알려지고,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1907년 의회는 학습은 책의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grant)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이후 공공 도서관의 책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정부 보조는 노동자 교육 협회를 촉발하는 전국적 조직 결성에 힘이 되었다.

학습 동아리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적극적 참여와 성 평등에 입각한 교육은 이미 학습 동아리의 아버지인 오스카 올슨(Oscar Olsson)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올슨의 이상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고 사회화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정규적으로 회합하는 동료서클(peer circle)이었다. 그러나 곧 그것은 보다 일상적 주제 서클, 즉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서클인 동시에 단기 지속하는 형태가 되었다.

학습동아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변화를 겪었다. ABF는 보다 크게 성장하였다. ABF는 임업 종사자들의 작업장과 해안 연안 지역에서 문학과 문화를 보급하는 과정에서뿐 아니라 강연 활동(SR lecture activities)를 고취하는 데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 왔다. 1948년부터 교육협회들은 그들의 사업과 동아리, 학습과 운영 조직들에 대해 지원하는 국가 기금이 증가하면서 팽창했다. 1950년대부터 강연 활동은 감소했고 일상적인 학습 동아리 활동이 주도적이 되었다. 점차 ABF 도서관들은 지자체에 흡수되어 1970년대 초 모든 ABF 도서관들은 자치단체 산하에 귀속 되었다. 이 시기동안 음악사업 혹은 음악운동(musikverksamheten)이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 음악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문화 활동들이 시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습 동아리 활동의 비중이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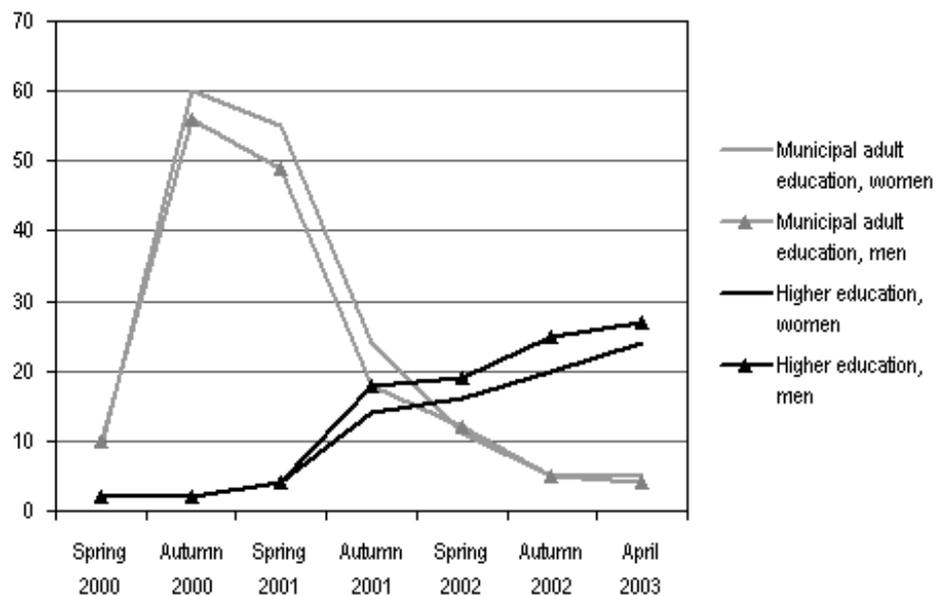
학습 비즈니스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동아리와 참여자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긴 했지만 다소 주춤한 경향을 보였다. LO(스웨덴노동자총연맹) 발간물에 따르면 노동조합 내에서도 학습 동아리는 점점 약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LO). 대신 최근 들어 ABF 내에서 강연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강연과 참여자의 수가 보다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에서 발행한 2005년 교육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면 학습동아리 참가자 수는 1970년대 후반 3백만 명에 가까웠지만 2000년대 들어 완만한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까지도 2백 5십만에 가까운 스웨덴인이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과학과

정보 관련 동아리는 20% 가량에 그치고 있다.

스웨덴은 1912년 이래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민주주의가 사회 내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고 사회는 번영하게 되었으며 교육 시스템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ABF와 성인 교육이 이 발전에 기여해왔다. 사민당 당수이자 정부 수상을 역임했던 정치가 올로프 팔메(Olof Palme)는 스웨덴을 “학습동아리 민주주의”라고 묘사한 바 있다. 학습 동아리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 교육 활동은 스웨덴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왔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관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공동체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웨덴인들은 어릴 때부터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태도, 타인의 주장에 대해 경청하는 습관, 관용의 문화 등을 기본적인 미덕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8> 지자체 성인교육과정 2000년 가을 1학년인 학생들 중 2000년 봄과 2003년 가을 사이 주요 활동으로서의 고등 교육과 지자체 성인 교육 변화

(단위: %)



출처: 스웨덴 통계청(SCB)

ABF는 현대 스웨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과업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ABF는 여전히 계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 배경, 거주지, 재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환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여전히 조직 내의 기본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2011. 2. 25 ABF 홈페이지 > ABF History).

◎ 교육내용

- 학습 동아리 조직(6~12명)
- 학습 동아리 리더 훈련
- 위원회(board/committee) 위원 대상 훈련
- 조직관련 이슈 트레이닝
- 주말 코스 제공
- 프로젝트 착수, 수행
- 문화 활동 수립
- 교육협회가 제공하는 정치관련 코스와 워크샵 (214개, 2012년 현재)
- 개설 강좌 및 워크샵 (개)

댄스, 영화, 행위 예술 (393)	컴퓨터, IT, 모바일 (956)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정원 가꾸기 (35)	경제, 비즈니스, 법 (67)
운전과 교통 (28)	사진, 필름, 미디어 (132)
지식 사회, 위원회 사업 (40)	역사, 계보학 (147)
건강, 라이프스타일 (324)	예술, 페인팅, 드로잉 (437)
문학, 스웨덴어, 웅변 (116)	요리 (172)
수학, 엔지니어링, 과학 (37)	환경, 자연, 동물 (73)
음악, 합창, 러닝 (473)	종교, 심리학, 교육학 (99)
여행, 풍경, 전원 (11)	사회, 정치, 무역 (219)
보트타기, 낚시, 사냥 (127)	언어 (1001)

EU, 세계화 등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한 코스 및 학습동아리, 민주주의 기본 개념 및 작동 원리, 작업장에서의 건강, 노조에 대한 이해, 여성평등에

대한 주제, 정치 시스템 작동에 대한 이해 등 다수의 정치 학습 코스 및 워크숍이 운영되고 있다. 작업장 내 노동자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 LO 가맹 노조원이라면 노조와 협력 하에 운영되는 할인 강좌 혹은 무료 강좌들이 있다. 누구나 지역 학습동아리에서 자신이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혹은 ABF 동아리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동아리에 소속되어 맞는 학습을 이용할 수 있다. 강좌마다 비용은 상이하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선택해 서클 리더, 잔여 인원수, 시작 연월일,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상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지역 ABF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설 강좌는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2012년 하반기에 시작될 “사회, 정치, 무역” 분야 개설 강좌 중 몇 가지 예이다.

▶ 사례 1: 민주주의 ABC

스톡홀름 ABF 지부에 개설. 수강료 무료. 2012년 10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17:00~20:30. 강의내용: A.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B. 왜, 어떤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보다 나은가? C. 만일 당신이 민주주의 과정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하고 있는가?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정과 상황적 적용, 민주적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실제적 분석 도구 등에 대해 배운다.

▶ 사례 2: 의회 방문-10월 24일

국회의원과 의회 방문. 참가비는 무료. 스톡홀름까지 이동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 사례 3: 시민권 운동의 역사

매주 수요일 19:00~21:30. 수강료: 295 SEK. 강의내용: 흑인시민권운동부터 스웨덴 이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심화 학습. ANC 운동과 여타 반인종주의운동 및 관련 정책 학습.

▶ 사례 4: 누구의 유럽인가?

2012년 9월 19일부터 격주 수요일 18:00~20:30. 수강료: 395 SEK(세 권의 교재 포함) 강의내용: 스웨덴 저명 언론인 강사. 평화, 협력, 민주주의의 희망이었던 유럽대륙이 점증하는 불평등, 인종주의, 정치적 분쟁 등으로 분쟁 지역이 되어가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 재정

- 정부, 주, 지자체 의회 및 평의회에서 보조
- 참가자 수강료 및 가맹 조직이 지원하는 수강료

◎ 중앙-주-지자체 수준의 역할

- 중앙 수준- 중앙사무국(the National Secretariat)
 - 가맹조직, 협력 합의 조직들과 관계 유지
 - 자유성인 교육(liberal adult education) 증진을 위한 어떤 종류의
 - 정치적 스터디와 공동연구가 필요한지 분석
 - ABF 조직 운용 및 성장 지원
 - 문화, 통합, 건강, 노조, 정치, 국제관계, 장애문제 등과 관련
- 주 수준- the ABF Districts
 - 학습 동아리 리더, 협력 조직들
 - 학습 동아리 조직가들 훈련 담당
- 지자체 수준- the ABF Branches
 - 학습 동아리 조직

(3) 성인교육협회 (SV, Studieförbundet Vuxenskolan)

- 자유당(Folkpartiet), 중앙당(Centerpartiet), 농민협회(LRF) 등 현재 보수우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보수 성향의 정당들뿐 아니라 사민당과 좌파연합을 형성하여 선거에서 협력하고 있는 녹색당(MP)이 현재 성인교육협회(SV, Studieförbundet Vuxenskolan)와 협력 하에 성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성인교육협회(SV)는 다양한 주제로 연간 50,000여개 강좌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30,000개의 문화 이벤트를 조직한다. 성인교육협회 역시

조직과 단체에 속해 “평생 학습”을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지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스스로 조직, 단체, 조직을 만들기 원하는 이들에게 조직을 만들고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 도움을 주는 과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동아리활동과 단체활동이 적극적으로 권유되는 스웨덴 사회의 특성상 리더십 과정은 스웨덴의 성인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인교육 강좌 주제 영역은 경제, 행태, 동물·자연, 사냥, 아트&수공예, 역사, 인문, 건강, IT&데이터, 커뮤니케이션·정보, 요리, 미디어·사진·영화·그래픽디자인, 환경, 음악·댄스·연극, 해양활동, 교육, 사회, 계보, 언어, 기술, 원예·집 꾸미기 등으로 노동자교육협회와 유사하게 문화 예술 강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교육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조직과 단체 (förening)’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인교육협회에 가맹되어 있는 다양한 경제, 영리, 비영리 단체 및 정당, 정치인,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치 훈련 과정이 주목할 만하다.

정치 훈련과정은 커뮤니케이션/리더십/조직발전/정당 등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특히 정당 정치훈련과 관련해서 성인교육협회는 선거관련 정치훈련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 사례 1: 선거기획하기: 성공적 선거 캠페인을 위한 기획

정치인들이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기술. 점차 유동적이 되어가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직전 효과적인 캠페인 방법, “선거기획하기”를 통해 성공적 선거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 사례 2: 정치인 학교

화법, 미디어 운영, 지역구에서 정치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 등 지자체, 주, 의회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받을 수 있다.

▶ 사례 3: 정치블로깅 학교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수적인 온라인상의 소통방식과 운영에 대해 교육.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치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움.

- 민주적 방법으로서 블로그
- 블로그의 시작 정신
- 개인 블로그에서의 언어, 자세, 톤, 비중에 대한 토의
- 더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방법과 운영자와 대화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기술

출처: 성인교육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v.se>

(4) 올로프 팔메 국제센터(Olof Palme International Center)

- 1992년 사민당 당수이자 전 총리인 올로프 팔메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창설.
- 미국의 베트남 참전 비판, 핵확산 저지 캠페인 전개,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지원 등 스웨덴의 독자적 외교 노선을 주장한 바 있는 올로프 팔메 총리의 유지를 계승한 재단인 만큼 목표를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두고 있다.
- ABF, LO, LO 가맹 노조들, 사민당, 영이글스, KF(협동조합연맹, 유통그룹), 임차인연합(Hyresgästföreningen) 등 스웨덴 노동운동 조직들이 팔메 재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북유럽 변방국이자 뒤늦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스웨덴이 190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을 이끈 경험에 입각하여 주로 민주주의 저발전국가들에 민주주의 사회 형성, 빈곤 감소 및 정당 활동에 대한 교육 및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27개 회원조직과 25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알바니아, 버마, 벨라루

스, 팔레스타인,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등 15개 국가의 민주주의 활동단체 및 정당운동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국가들의 정당 창당, 민주주의 교육, 청년 리더십 교육, 여성평등, 평생 교육 등이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여성, 발칸반도의 청년, 라틴아메리카 정당들, 짐바브웨 노동조합 등이 그 대상이다. 센터 운영자금은 주로 스웨덴 외무부 산하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에서 지원받지만 그밖에도 센터 기부금이나 기금이 중요한 재원이 된다(올로프 팔메 국제센터 홈페이지: <http://www.palmecenter.se> 참조).

2) 스웨덴 정당 정치교육

가) 스웨덴 정당 정치교육 개요

1960년대 이래로 정부 보조(donation)가 정당 자금의 주요 원천이 되어 왔다. 정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일반 정당 활동을 위한 지원, 릭스다그(Riksdag; 스웨덴 의회) 의원을 위한 지원,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일반적으로 정당 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난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의회진입요건 -전국 4%득표, 3석 이상의 의석 획득-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최근 선거와 그에 선행하는 선거에서 전체 투표의 2.5%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투표 용지 제작비 등 자금지원을 받는다.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정부의 통제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그러나 스웨덴 정당들은 자체적으로 당의 정치자금을 공개하는 것에 합의하고 유권자들에게 공표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2002년 집권당이었던 사민당 자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이 정부지원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웨덴의 정당 활동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스웨덴 내 최근 연구는 스웨덴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정치훈련”이 갖는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사회 속의 개인들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리더십 교육 및 자신이 속한 단체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의 정치훈련을 거쳐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키고 정치적 기술을 향상시키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출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Lundin, Skan and Zetterberg 2011).

스웨덴 정치에서도 당직과 공직 출마에 보다 유리한 입지를 갖는 사람들은 당내에서 적극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간, 자금,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에서 일반 당원 교육과 리더십 훈련 과정, 당내 조직의 리더 경험 등을 통해 당내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당 내에서의 정치교육과 리더십 훈련이 스웨덴 민주 시민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방식과 정치교육 유형, 구체적 프로그램 등을 살펴봄으로써 스웨덴의 정당 정치교육이 스웨덴 특유의 사회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와 합의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민당의 정당 정치교육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교육은 노동운동, 일상적 교육활동, 정당 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성장해온 사회민주주의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민당은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정당의 정책적 목표로 둔다. 스웨덴 사민당이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공공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나 복수의 정당이 선거경쟁을 하는 절차적 의미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부 시스템 이상이며 결정을 내리는 도구 이상이다. 민주주의는 비단 선거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 학교, 일터, 이웃에 침투하는 가치 체계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주의적 가치의 핵심은 평등과 인간 존엄성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필연적 결과로서 등장하는 주변화, 소외, 복종 등의 문제들을 극복

하기 위한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는 스웨덴 사민당의 민주주의가 구현된 형태이자 훼손될 수 없는 사회 운영 원리이다. 따라서 스웨덴사민당의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기본적 접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형태로 참여하는 기회를 창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사회 내 불평등이 증가하고 복지를 훼손할 것이다.⁸⁾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민당의 당원 교육은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념, 조직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적 의제에 대한 당원들의 지식 함양, 리더십 교육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 사민당의 당원 교육

당의 기본 정책에 대한 입장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발전하고 훈련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간의 알 권리에 입각한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이 힘이다”라는 원칙이 당 멤버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사민당의 당원 기초 교육은 사민당의 이념과 역사, 사민당의 형성과정과 그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다.

사민당의 기초 당원 훈련은 크게 역사, 이념, 조직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7년 업데이트 되어 기본 교재가 되는 매뉴얼을 새로 작성하는 중이다. 주제 별로 약 30~50여 페이지 분량의 소책자가 교육 자료로 제시된다.

첫째, 사민당의 역사. 사민당의 역사는 노동운동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노동 운동과 사민당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해왔는지. 다른 정당 및 대중 운동들과 비교한다. 주요 내용은 사민당 주요 정치인, 조직 발전사, 사민당 주요 가맹조직에 대한 소개, 스웨덴 사민주의에 대한 이해 등이 시대별로 제시되어있다.

8) 사민당 홈페이지 <http://www.socialdemokraterna.se/Framtidsarbetet/Framtidsarbetet---Var-organisation/> 참조

둘째, 사민당의 이념. “당신은 왜 사민주의자인가?”는 사민당에 가입한 당원에게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다. 이념에 대한 학습은 당원들로 하여금 다른 이념들과 비교하고 사민당의 가치를 획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사민주의 이념의 핵심인 민주주의, 평등, 연대적 가치와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셋째, 사민당의 조직. 사민당은 대중운동 정당이다. 팀을 구성해 정치와 이념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사민주의 아이디어를 발전, 적용시키기 위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직이 변화와 영향력 행사를 위한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사민당은 ABF와 협력하여 당원 및 리더십 교육을 제공한다. 사민당에 링크되어 있는 학습포털 사이트인 사민당-ABF (<http://www.socialdemokraterna.abf.se>)에서 현재 진행되는 학습, 핵심 코스, 훈련과 현재 발행되는 보고서에 대한 정보와 학습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사민당원들에게는 ABF에서 진행하는 정치 주제와 관련된 학습을 권유하고 있다.

사민당 지부(partidistriktet)를 중심으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세미나와 학습활동을 담당한다. 중앙당은 지부에서 시행되는 활동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스웨덴사민당이 2012년 1월 2일부터 18일까지 6,930명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민당 당원은 남성이 56%로 여성보다 근소한 차로 많으며 중등교육 졸업이상의 학력자가 42%,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자가 38%에 달한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당원 비중은 28%에 불과해 여전히 당과 노조의 인적 중첩성이 두드러진다. 그 가운데 LO(블루칼라노동자총연맹) 소속 당원 38%, TCO(화이트칼라노조 연맹) 소속 당원 24%, SACO(전문직 노동자 연맹) 소속 당원 10%. 단독 빌라 소유자의 비중이 54%에 달한다. 입당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36%가 사민주의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24%는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16%는 사민주의를 지지하는 출신 배경에 의해 사민

당에 입당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가운데 절반은 스스로 소극적 당원이라고 답변했다. 당원 가운데 53%가 2011년 하반기동안 적어도 한번은 당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고 당원 가운데 56%가 2010년 총선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1년 학습 동아리(study group) 활동에 참가한 당원 비중은 16%, 코스 참가는 11%인데 비해 노동절 행사에 참여한 당원은 59%에 이르렀다. 이처럼 스웨덴 사민당의 당원들이 일상적 당내 학습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상적 학습 활동보다는 이벤트성 행사나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중 77%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주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당원은 48%, 의회 내 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당원은 66%에 이르렀다. 당원 가운데 56%가 당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47%는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당 가입으로 인해 공직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는대거나 (27%), 개인적 발전(29%)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당원은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당원의 38%가 정당 가입으로 인해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고 인정한다는 점이다(사민당 홈페이지 학습 포탈<http://www.socialdemokraterna.abf.se>, 당원 교육).

(2) 스웨덴사민당(SAP) 당원 및 리더십 교육 사례

© 사민당-ABF 학습 포탈(Socialdemokraternas studieportal)



Socialdemokraternas studieportal

▲ 사민당-ABF 학습 포탈 배너 (출처: <http://www.socialdemokraterna.abf.se>)

○ “정치학습”

사민당과 ABF 공동 학습포탈 사이트에서 다양한 주제의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ABF가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과 수행하는 학습 가운데 정치 학습에는 핵심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주제별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다. 각 주제별 학습동아리를 위한 교육 자료 또한 ABF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거나 혹은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 노동시장

▶ 주제 1.1 협상하기: 블루, 요구, 레드

노사 간 임금협상과 관련된 이슈와 주제들을 다룸. 현재 스웨덴 노사협상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제가 다수. 사용자측은 협상 유연화, 개별화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인상, 여성 임금 인상, 정규직 증대 등을 요구하는 이유와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다룬다.

▶ 주제 3.1 스웨덴 모델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다.” 스웨덴 국가가 자본과 노동 계급 사이에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균형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학습, 토의한다.

▶ 주제 3.6 청년층과 직업

단체교섭 과정에서 청년 고용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측의 입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중도우파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주제 4.1 EU-새로운 노동

급변하는 스웨덴 노동시장현실, 1994년 EU가입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들, EU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시장 관점, 라발 판결사례

를 통한 노사관계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문제, EU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분석한다.

▶ 주제 1.3 2011-2012년 임금협상, 누가 이겼나?

승자가 없다-모두 승자다. 점차 분산화되고 있는 임금협상라운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토의한다.

• 유럽/EU

▶ ABF는 “누구의 유럽인가?”를 주제로 한 웹 기반 자료를 통해 EU와 유럽에 대한 교육과 정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권력, 정의, 시민권에 초점을 맞춰 토론하고 유럽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 지속가능성, 기후, 환경

-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는 단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 죽음에 이르는 성장: 개인과 사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만 여겨왔던 경제성장에 대한 의문. 환경 문제, 경제 위기 등...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할까? 라는 물음이다.

• 국제

▶ 노조-정치 영어 교육

스웨덴어와 국제노동운동 관련 용어와 표현에 대한 용어사전인 『영어 노동조합 정치 용어 (Engelsk fackling politisk ordlista)』 제작, 판매.

정치와 사회 이슈들에 대한 용어가 포함된다.

• 미디어

▶ 누가 당신의 생각을 결정하는가? - 미디어 비평에 대한 학습

- 미디어는 지역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정치, 범죄 및 기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통제한다. 그러나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들은 모두 진실인가? 다른 유형의 미디어들 간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광고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 학습 동아리에서 미디어화에 대한 교육영화를 보고 스톡홀름 대학의 저널리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공공관계학과 전문가가 쓴 교육 자료를 보고 토의한다.

• 인권

▶ 인권-카드를 이용한 교육

유엔 성평등과 여성권리 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어 혹은 스웨덴어 인권-카드를 이용해 유엔 여성 인권과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N 인권카드 ▶



• 조직화

▶ 자발적으로 단체나 활동 그룹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자료-활동 핸드북(캠페인 매뉴얼), 단체시리즈를 제공한다.

• 정치 이념

- ▶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자료 제공

평등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서술한 『평등 모래』(2009), 서로 상이한 이데올로기-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페미니즘 등- 뒤에 존재하는 근본 가치에 대한 핸드북 『정치이데올로기』(2007) 판매 및 교재를 통한 학습 가이드를 제공한다.

•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 ▶ 유럽의 무슬림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열린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슬람혐오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토의한다.

- ▶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대한 롤플레이-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관련 토의를 위해 임원 훈련과 단체와 동아리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국가 경제

- ▶ “진보적 경제(Progressiv Ekonomi)” 홈페이지: 사회와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내용 다룬다.

- ▶ 『좌파를 위한 경제-평등과 번영 이론』

평등과 복지와 같은 가치를 위한 경제이론의 구축을 위한 교재와 교재활용을 위한 지침이다.

• 소설

- ▶ 소설과 같은 이야기 책은 노동조합과 정치 이슈에 접근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제시된다.

메리 함베르이(Mary Hamberg)의 『꿈 공장(Drömfabriken)』(2010)를 통해 공장 노동자의 삶에 대한 접근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토의한다.

• 복지

▶ 우파연합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설명을 내용으로하는 교재 『부르주아 정부 정책과 그 결과』 (2010)의 일독과 이에 대한 학습과 토의를 진행한다.

▶ 노동운동 씽크탱크에 의해 발행된 리포트 『생산적 복지』 (2011)를 읽고 복지와 성장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와 잘 작동하는 건강보험을 위한 정치적 투쟁이 왜 질병에 걸린 사람들 뿐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모델과 성장 기회에 필수적인지에 대해 토의한다.

▶ Fredagsmys-아동 빈곤에 대한 학습동아리를 위한 작업계획: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 아동빈곤에 대한 사민당 자료에 기반, 스웨덴과 같은 부국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220,000명의 빈곤 아동의 현실에 대한 학습을 기획한다.

○ “단체에 대한 지식(föreningskunskap)”

- ABF와 사민당 및 여타 정당, 노조 및 단체들과의 연계 하에 실시되는 교육⁹⁾

스웨덴 내 대부분의 단체는 전국 조직이다. 단체 활동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가 있을 때 통상적으로 대중 운동이라 지칭된다. 정당, 노조, 장애인 단체, 연금생활자 단체, 자유교회운동, 금주운동, 스포츠 운동, 농민 운동 등이 이에 속한다. 대중운동 단체 활동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훈련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조직 활동이 스웨덴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기본으로 강조한다.

- “단체에 대한 지식” 교육에는 대중운동 단체 전반에 대한 지식, 미팅 기술-미팅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방법, 구성원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기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집행위원회 구성과 절차,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과 역할, 회계 감사관의 기능과 역할,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원의 역할, 학습을 조직하는 조직가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9) <http://www.abf.se/Om-ABF/medlemsorganisation/Foreningskunskap/>

◎ “사민주의적 대안” 에 대한 webbsänt 세미나

– “차이를 만드는 사민주의 정책의 날”

2014년 총선을 정확히 2년 앞둔 2012년 9월 15일을 사민당과 부르주아 연립정부간의 정책적 구분을 명확히 할 때라고 규정하고 ABF 센터 (ABF-Huset)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심 이슈는 경제와 일자리, 평등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안정과 평등을 위한 핵심인 사회 보험, 시장과 민주주의, 공공부문을 위한 자원 등이다. 세미나의 모든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ABF의 동영상 웹사이트 www.abfplay.se 를 통해 공개된다.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에 해당하는 스비아베겐 (Sveavägen), 스웨덴 사민당사 맞은 편에 위치한 ABF-Huset ▶



◎ 팔메 documentären에 대한 연구

영화 “팔메(PALME)” 스웨덴 전국 상영을 기념하여 스웨덴사민당 총리를 역임하다 피살된 올로프 팔메 시기와 업적에 대한 토론과 연구. ABF 웹사이트를 통해 올로프 팔메에 대한 다양한 토의 게재. 팔메기념재단, 팔메국제센터, ABF 스톡홀름, 노동운동자료센터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 “600 지도자” - 리더십 교육

– 정치지도자(의원 등) 양성 프로그램

- 사민당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정치 및 정당 조직에 대한 이해, 세계 역사·정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리더의 임무는 정책을 개발하고 현실적 선거공약을 수립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만일 대중 활동가라면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 지자체 조직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이끌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으로서의 나는 나를 나의 직업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의식적 정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사민당은 그들 자신의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리더십 교육을 제안한다. 당직 혹은 정부의 공직을 맡고 있거나 원하는 잠재적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 **봄메르스빅아카데미(Bommersviksakademien): SSU¹⁰, 사민당, LO의 협력**

- SSU와 사민당, LO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리더십 교육과정.
- 목표: 노동운동 미래 리더십 기술을 향상과 지도자 양성.
- 1년간 총 500여명의 미래 청년 지도자 배출 계획이며 4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75명의 청년 지도자들(약 25~35세)이 첫 번째 봄메르스빅아카데미 (Bommersviksakademien) 과정 수료.
- 2012/13년 과정은 2012년 10월 5~7일부터 시작되어 2013년 5월 종료될 예정.

◎ **캠퍼스 봄메르스빅(Campus Bommersvik)**

- 옘살라대학, 스톡홀름경제대학의 IFL, Bergh's School of Communication 등 고등교육기관과 협력 하에 특히 비영리 부문의 선출직 공직자, 피고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전문적 트레이닝 제공.
- 봄메르스빅아카데미(Bommersviksakademien)를 통해 협력

10) 사민당 청년조직. the Young Eagles 사민당 청소년 조직.

◎ 노동조합교육 웹사이트 (fackligutbildning, www.fackligutbildning.se)

노동조합교육 웹사이트 www.fackligutbildning.se는 스웨덴 북부에서 남부에 걸쳐 스웨덴노동자총연맹(LO)에 가맹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훈련과정을 포괄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현 거주지 혹은 자신이 가입한 노조를 통해 적절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포함된 지역을 클릭하면 링크된 사이트로 연결된다. 가맹노조, ABF, 다른 지역 노조 조직들이 제공하는 코스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 노조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소개글과 가입 안내문이 함께 게시되어 있다. 미리 자신이 가입한 노조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근무 중인 직장에 교육 참가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경우, 근로자가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발생하는 근로손실일을 보상하는 직장대표법과 학습휴가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다.

▶사례 1. Dalarna och Gävleborg LO 지부가 실행 중인 노조원 교육 프로그램

- MBL과 협상에 대한 학습-중앙 LO 코스: 단체교섭 시 노동환경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코스. 다른 노조의 이슈와 통합하여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코스. 주로 노사 단체교섭 당시 협상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코스 비용은 유료 5880 SEK

- 노조원 트레이닝 스텝-2-노조와 사회: 왜 노조가 사회 이슈들에 개입하는가, 노조 가입원들은 어떤 미래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종합적 교육.

교육내용

- 왜 노조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가?
- 상이한 정치 이데올로기들에 대해
- 오늘날의 정당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활동하는가?
- 우리는 시민을 위한 건강한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나는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고 정치적 관점의 차이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사회를 창출하기를 원하는 노조원과 SEKO 선출직 임원들. SEKO의 노조-정치 연계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제공하는 선출직 대상 기초 교육(GFU)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확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 노조와 공동체 /건강한 도시: ABF는 교육 코디네이터로 노조원 교육을 위한 학자금 펀드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룹 작업과 토의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인간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다양한 주의(isms)에 대해 이해하고 노동자를 위한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목표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은 LO 가맹 노조의 모든 노조원들이다.

◎ 아레나 대학(Arena University)

- 노동조합, 스웨덴 주요 대학들의 협력 하에 노동운동의 대안적 씽크 탱크 구축을 목표로 함.
- 대학과 노동조합 뿐 아니라 기업, 정부기관, NGO 등이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스톡홀름대, 옹살라대 등 대학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강좌 운영.
- 강좌 내용: 프로젝트 관리, 학습, 강연 등 제공. 재정, 노동, 복지, 교육 및 연구조사, 이노베이션, 국제 정치, 에너지-환경-기후, 미디어, 문화, 조직화, 노동조합 운동 등 방면의 전문가들이 강의 제공.

- 평등, 성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 및 자유에 기반을 둔 가치에 입각.
- 2012년 현재 개설, 운영 강좌
 - 커뮤니케이션과 애드보커시
 - 조직 내 선출직들을 위한 정치 및 리더십 기술 함양
 - 고등학교 대상: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취업 지원서 작성 방식과 일자리 안내 제공.
 - 글쓰기 강좌
 - ▶ (실용적) 글쓰기 강좌- 글쓰기 훈련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글쓰기 방식을 습득하는 강좌
 - ▶ 정치적 글쓰기 강좌- 비스카달렌 인민대학(Viskadalens folkhögskola) 이아레나그룹과 협력 하에 개설. 노조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학생들,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치적 글쓰기 코스. 원조나 인권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참가 가능. 참가자들은 다수의 글쓰기 과제를 수행, 강사와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지속적 피드백을 받는다.
 - ▶ 옴부즈만 훈련- LO의 옴부즈만 훈련 과정에 포함된 글쓰기 훈련
 - ▶ 개별적 웅변 코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로 표현하고 패널 토의에 참여하는 효율적 방법에 대한 지도. 이론, 관찰, 개별적 피드백으로 구성.
 - 맞춤 코스: 노동조합, 스톡홀름 주 사민당, 녹색당 의원, 지방정부 인력자원부 및 커뮤니케이션부, ABF 북 스톡홀름 지부, LO 옴부즈만 트레이닝 등 교육 담당.

이론과 개별적 피드백을 결합한 강좌방식, 현재 진행 중인 공공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강사진, 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 오피니언 리더 배출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정치교육형태와 차별점을 둠.

- ▶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학교-토마스 린드봄(Tomas Lindbom)과 5일 코스. 강좌유형: 이론+개별 글쓰기 과제

주제: 대·내외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체성과 관계형성,

- ▶ 말하기(웅변) 코스- 피고용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말하기 훈련. 참가자들 실습, 강사의 피드백.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코스.

다) 사민당 이외 스웨덴 주요 정당들의 시민정치교육

(1) 보수당(Moderaterna)¹¹⁾

2012년 현재 중도우파연정을 이끌고 있는 보수당(Moderaterna)은 55,000여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보수당 청년조직과 여성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민당에 비해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는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6년과 2010년 집권을 계기로 현대적 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원과 활동가 모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¹²⁾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스톡홀름 보수당 지부는 7000명 당원 모집을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미팅이 활발하다. 성인교육협회(SV)와의 협력 하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시민정치교육이외에도 보수당 지역 조직에서 다양한 정치캠페인 및 당원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 사례 1. 남오스카르(Oscars Södra) 지부의 펍폴리틱(Pub Politique)

펍폴리틱은 식당이나 바에서 주, 지역, 정부 차원의 보수당 운영과 정

11) 스웨덴보수당 홈페이지 <http://www.moderat.se>, 스웨덴보수당 스톡홀름 시·주 지부 홈페이지 <http://moderaterna.net/skarholmen> 참조

12) 2011년까지 각 정당이 공개한 당원 수에 의하면 스웨덴사민당은 105,627명, 보수당(온건당) 59,981명, 중앙당 49,322명, 녹색당 14,648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민당 당원 수 역시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타 정당들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제로 토론하는 모임. 2012년 가을에는 8월 20일 17:15~18:15 첫 번째 모임으로 시작.

▶ 사례 2. 스톡홀름 외스터말름(Östermalm)에 대한 당원 의견 청취

스웨덴 전체나 스톡홀름 주, 외스터말름에 대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해 보수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갖는 미팅.

▶ 사례 3. 세미나 개최(보수당 스톡홀름 시 정치발전위원회 개최)

2012년 하반기 스톡홀름 시 정책과 이슈에 대해 토의하는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31일 학교와 유치원의 미래에 대한 정책 발제, 토론.

(2) 기타 정당

중앙당, 자유당, 녹색당 등 좌파 혹은 중도우파 정부 연정에 참여하는 군 소정당들은 성인교육협회(SV) 등의 교육단체들과 연계 하에 정치일반과 리더십교육, 당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성인교육협회와 연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단체 내에서의 평생 학습”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단체 내에서의 민주적 과정, 예를 들어 정당 내 위원회 활동, 당원 영입 방식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 등에 관련한 교육들이다. 정당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각자 필요한 조직 내 활동에 대한 교육들을 성인협회와 연계 하에 세미나, 워크샵, 전시, 이벤트, 대중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가) 중앙당(Centerpartiet)

중앙당은 성인교육협회(SV)와의 협력 하에 기초 당원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기초교육

중앙당은 영역과 수준을 각기 셋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훈련 전략을 채택

하고 있다.

▶ 세 가지 영역

- 정치와 중앙당에 대한 입문
- 정치 리더십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 조직

▶ 세 가지 수준

- 기초 훈련 - 선거구 수준(지자체)
- “몸통 훈련” - 지역(주)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당원 대상 교육 (qualified education)”
- 전국 수준

성인교육협회와 중앙당 협력 하에
만들어진 당원 기초교육
(basutbildningar) 자료 ▶



기초 교육은 각 선거구 중앙당 조직에서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된다. 위와 같은 기초교육과정은 복수의 선거구 조직 간의 상호 협력 하에 코스가 진행되기도 한다. 중앙당이 SV에 의뢰한 당원 기초교육용 학습 자료는 총 7가지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당 당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와 SV의 훈련 담당자가 다양한 코스를 이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원 교육에 있어 당의 필요와 전문가의 지식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합되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 SV 중앙 및 지부에서는 훈련 담당자의

교육 또한 담당하고 있다. SV와 중앙당의 분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SV의 역할

- 교육 자료와 코스 주제 개발
- 교육 담당자 훈련과정 구성
- 교육 담당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감별
- 내부 교육 충원에 대해 중앙당 지부 조직들과 의논
- 교육 담당자 훈련 충원에 대해 중앙당 지부 조직들과 의논
- 공동 계획과 선거구 차원 훈련의 재정에 대해 중앙당 지구당 의장과 접촉
- 지구당의 현재 필요와 희망에 의거하여 중앙당 서클들에 대한 기초 교육 훈련 조직
- 훈련 초대장 발송
- 훈련 참가자 등록 및 예약 담당
-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 등록한 참가자에게 등록 확인 통보
- 훈련에 필요한 비품 및 준비 사항 점검

▶ 중앙당 지부(선거구 차원)의 역할

- 각 선거구에서 기초 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 교육 훈련에 참여할 대상자 충원
- SV와 중앙당 지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지역 훈련 코스 예산에 근거, 등록비 지불

○ 중앙당의 이데올로기 프로그램(Idéprogramsarbete)- 미래 건설

▶ 전국에 걸쳐 60명의 훈련 매니저 양성: 중앙당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당의 기본 가치와 아이디어를 토의하는 미팅을 이끌 수 있는 선거구당 2~3명, 전국적으로 60

명의 교육 담당자 양성 계획.

▶ processkvällar를 위한 3가지 접근: SV가 processkvällar를 위해 세 개안의 구조를 제시한 바 있음.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입각하여 변화 가능.

▶ 미래 건설을 위한 학습: SV가 미래 건설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함. 세 주제에 따라 조직됨-인간과 사회의 관점, 안정과 자유의 인식,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점. 각 주제는 저녁 학습 속에서 단일 주제로 미팅 과정의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유당(Folkpartiet)

▶ “지구화 시대의 자유주의(Liberalism I globaliserlingens tid)”라는 주제로 새로운 정당 강령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의 구축을 위해 새로운 학습 동아리 구성, 운영 중.

자유당은 정당 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다. 2012년 성인교육 협회(SV)와 자유당의 협력은 특히 워크샵과 협력 미팅, SV ARENA와 기타 공개 미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정에서 자유당이 목표하는 바는 정당 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다. SV ARENA는 지역과 스웨덴 전체 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에 대해 토론과 토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회합 장소이다.

SV ARENA 표지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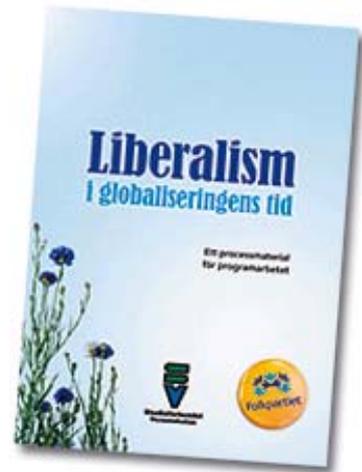


개인과 자유, 변화하는 세계, 보다 강한 스웨덴 만들기, 복지 보호 등을

주제로 조직된 학습 동아리는 이념적 토의와 활동을 위한 중요한 행동 주체이다. 자유당은 성인교육협회와의 협력 하에 학습 동아리를 조직하고 새로운 강령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화 시대의 자유주의”라는 중간 과정적 성격의 자료를 개발해왔다.

자유당의 새로운 강령 수립을 위한 자료집

“지구화 시대의 자유주의” ▶



(다) 녹색당(Miljöpartiet)

녹색당은 성인교육협회와 협력하여 환경과 녹색운동과 관련한 스터디 모임 조직을 지원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성인교육협회가 녹색당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 기후에 대한 연구-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후-스마트 운송”
 - 녹색당의 “250000명 의견 모으기 캠페인(250,000 call campaign)”의 일환.
 - 2014년 총선을 대비한 녹색 정치적 대안의 발전 모색.
250,000명의 녹색정치 의견 수집이 목표.

성인교육협회와 녹색당이 공동 제작한 자료집 ▶



▶ 새로운 정당 프로그램 2013

녹색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녹색당의 새로운 강령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의견 수렴과정 채택. 2012년 5월까지 녹색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조직, 기업 등으로부터 지속적 열린 대화 추진. 성인교육협회와 협력 하에 녹색당 활동가들은 효과적 조직화와 캠페인 방식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녹색 생각(Tänk grönt)- 미래를 위한 21개 텍스트

- 녹색 이슈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자

▶ 아버지 캠페인(Pappakampanjen)

- 페미니즘, 남성, 부모됨에 대한 문제제기.
- 자유에 대한 이슈로서 남녀평등(jämställhet)을 사그하는 녹색당 정책에 관심을 갖고 보다 개인화된 부모의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함. 녹색당 양성평등위원회와 함께 진행.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1) 독일의 정당 정치교육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 활동을 돕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으로서 정치이념과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에 대해 법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개방성 및 정당에 대한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이후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정치재단은 독일정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과거 나치 독일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 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독일 정치교육은 독일의 정치문화인 전통적·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극소화시키고 선진적·민주적 정치문화를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정치교육은 오늘날 독일의 모든 교육제도에서 전반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어져 학교, 대학, 성인교육, 학교 외 청소년교육, 그리고 직업양성 및 계속교육시설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확립되었다.

특히 정당에 독립적인 정치재단, 연방정치교육원 및 주정치교육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병존은 교육의 과제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독일의 정치교육체계가 갖고 있는 다원주의적 구조를 표현하는 것

이다. 이는 전후 나치체제 극복과 독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에 연방정치교육원, 주정치교육원과 같은 국가적 교육기관이 설치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정치교육의 운영 및 내용적인 면에서도 초당적이며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자율성, 중립성 및 사업의 연속성은 조직구조는 물론 연방예산을 통한 안정된 재원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일인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에도 독일 정치교육이 민주적 정치문화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보고 있으며, 그 방법은 소위 ‘다원성의 통합(integration in diversity)’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치교육 담당체계의 확립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추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 국민들은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통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시민적 정치문화의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일 정치재단처럼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베른하르트 포겔(Prof. Bernhard Vogel) 전 콘라드 아네나워 재단 이사장의 말처럼 “정치재단은 가능한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 사회적 사안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들에게 관련 지식과 판단능력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듯 정치재단의 생성 동기는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 및 사회 전반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즉,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한 번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정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치교육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소에 배분되는 국고 보조금의 30% 이외에도 정당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 구속적(지정형태로)으로 일부 허용하여 정치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 국민들은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정치교육과 정치재단과 같은 다양한 정치교육을 통해서 독일의 시민적 정당 정치문화의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독일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2) 스웨덴의 정당 정치교육

스웨덴의 정당 정치교육은 아래로부터 확산된 대중운동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계몽주의적인 동시에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교육 체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어왔다. 따라서 스웨덴 정당들의 정치교육은 형식과 내용,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개별 정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교육 및 리더십 훈련 차원에서의 지역 공동체 성인교육 제도들과의 협력 하에 실행, 유지되고 있다.

스웨덴 정당 정치교육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자유 시민교육은 정부 주도의 공교육과는 다르게 교육의 목적과 방식 면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사회 공동체내의 주체들에 의해 운영된다. 스웨덴의 평생교육체계의 특수성은 이와 같은 지역적, 사회 공동체적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전체 교육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인 데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 강화와 사회발전을 위한 참여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만을 제시하고 교육내용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다. 정부 보조금은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FBR)을 통해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비영리 대중 조직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둘째, 자유 시민교육과 정당 정치교육의 연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시민교육과 공교육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스웨덴의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정당의 정치교육은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성인정치교육활동과의 연계 속에 진행된다. 노동자교육협회, 성인교육협회 등의 전국적 조직을 갖춘 교육협회들은 각 지역의 지부들을 통해 교육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각 정당이 요구하는 당원 교육 프로그램 및 선거 프로그램,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등의 맞춤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며, 정당 정치교육 관련 교재들을 출판한다. 오랜 성인교육과 정치교육 경험에 의해 교육협회들은 기초적 자료와 데이터, 커리큘럼 등을 축적하고 있으며 각 정당들과의 조직적 연계는 중앙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당원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정당 차원에서의 균열이 정당정치교육 차원에서도 특징적이라는 점이다. 스웨덴의 정당 정치는 사민주의 블록과 비사민주의 블록, 혹은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연합과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연합으로 나뉘어져 선거전이 치러진다. 1970년대까지 무려 44년여를 집권한 경험이 있는 사민당은 노동자교육협회를 통해 당원 정치 교육 및 리더십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들과의 연계 하에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전문적 훈련을 보충하고 있다. 보수당과 중앙당, 자유당은 성인교육협회를 통해 당원 교육 및 리더십 훈련, 정당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정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교육 주체의 차이는 스웨덴의 대중운동 및 노동운동이 지역의 풀뿌리 교육단체와 함께 성장해온 근대 이후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사점 및 제언

독일과 스웨덴 정당의 정치교육은 두 나라의 정당정치만큼이나 한국의 현실과는 다르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과 제도화 과정, 교육 체계의 상이성을 무시한 채 두 나라의 정당정치교육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가 한국의 정당정치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한국의 정당들은 정당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체계적 정당정치교육이 거의 부재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중앙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인적 충원이 이루어져 왔고, 리더십 훈련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 혹은 개인적 수행비서의 역할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 수준부터 민주주의 심화 차원의 논의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정당교육 프로그램은 정당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자각의 부족과 참여의 저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 리더십 및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 제도적 차원에서 꾸준히 실행되고 있는 정치교육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 정치는 정당정치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도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가 확립된 이래 보다 성숙하고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와 사회의 괴리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들이 사회 속의 정당이 수행해야 할 정치사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에서처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과 같은 풀뿌리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성인교육의 일환으로서 정치교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보다 확장하여 정당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과정을 개발하며, 개별 정당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리더십 훈련 및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간다면 한국형 정당정치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의 성숙과 합의적 정당정치 문화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당 정치교육 및 당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 내부적 요인으로 당원교육 주체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민관정당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정당이 당원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치교육의 주체가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당원 혹은 유권자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크게 정당, 선거연수원, 시민단체, 민간연구소 등의 4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민간연구소와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에 부응하는 자발적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 혹은 정치아카데미 형식으로 교육을 제공한다.¹³⁾ 또한 각종 진보 혹은 보수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정치 및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특강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거연수원은 공직선거법의 제약으로 위축된 정당의 당원교육을 대신하여 광범위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권자 교육을 가장 활발히, 가장 큰 규모로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조직은 중앙선거위의 선거연수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관(官)주도의 정치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로 인해 시민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영태 2006). 이러한 지적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자산, 즉 사회 쟁점 현안에 대한 파악 능력,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대안 제시 능력, 전문가 풀의 확보 등의 자원을 공유한다면 정치교육은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정당-시민단체, 선거연수원-시민단체, 정당-선거연수원-시민단체, 정당-선거연수원-민간연구소 등의 조합을 통한 ‘민관정당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정치교육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13)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생아카데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있을 것이다.

둘째, 상술한바와 같이,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치교육은 모든 연령층, 모든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정당에의 참여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정치지식과 정치사회화가 정치교육의 공급을 통해 습득되어야 하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사회자본, 신뢰, 관용 등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습득되어야 한다. 정치교육은 민주적 사회 가치의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좋은 제도가 성과를 발휘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개선방안으로는 당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의 문제이다. 현재 교육시설의 부족은 정당의 당원교육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의 여러 제한 규정과 정당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수원 시설을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확보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임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원 교육은 당일 교육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1박2일 정도의 일정으로 수행해야만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당원교육을 위해선 연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불법적인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를 당원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며, 법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동원해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현재 선거연수원에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연수원이 실시하는 당원교육은 일반 콘도 시설을 대신 활용하고 있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임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당이 별도의 연수원 건물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당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시설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태. 2006.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당원교육의 중요성과 전략,” 『한국민주 시민교육학회보』 .
- 김영태. 2009a. “정당발전과 내부개혁,”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1호.
- 김영태. 2009b.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당원교육의 중요성과 전략,”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전문가 칼럼, 8월.
- 김용호. 2008. “한국정당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찰,” 『한국정당학회보』 제7집 2호.
-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을 대상으로』 - 전국사회교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독일연방정치교육원. 2011. 독일연방정치교육원 2010년 연간보고서.
- 박경미. 2010. “정당위기론의 재평가: 이론적 논의와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의 적용,” 한국정당학회 추계학술회의, 10월 8일.
- 변광수. 2009. 9.29. ‘가문의 영광 꿈꾸지 않아 행복한 사회,’ 프레시안.
- 신두철. 2007. “한국정당정책연구소와 독일정당재단의 역할과 특징”, 『유럽연구』 제25권 1호.
- 신두철. 2009. “독일 정치재단의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3호.
- 심익섭. 1998.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대한 연구: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논총』 .
- 이현근. 2010. “스웨덴 정치발전의 경험과 가치 공유: 평등, 여성, 시민교육 그리고 ‘건강한 사회’ 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 3:1. 51~80. 국제지역연구학회.
- 이현우. 2009. “당원교육의 필요성과 민주시민교육,”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전문가 칼럼, 8월.

- 장선화. 2011. 『스웨덴의 제도변화와 정책전환: 계급타협제도와 완전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1950~2010』.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훈. 2010. “서구정당 모델의 수입 혹은 적응?: 한국정당 연구의 적실성 문제와 역사로의 전환,” 한국정당학회 추계학술회의, 10월 8일.
- 조대엽. 2009.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1호.
- 조찬래 외. 2010. 『선거연수원 정치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선거연수원 연구용역보고서, 7월.
- 조희정·박설아. 2012.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2009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2010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 채진원. 2011. “한국 정당조직 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및 과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심포지엄, 11월 23일.
- 카르스텐 그라보프,. 2006. 독일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의 역할”,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의 역할 세미나』.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2011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2010년 연간보고서.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0년 연간보고서.
- ABF. *Knowledge within reach: A presentation by 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of Sweden*. No. 2085. ABF.
- Andersen, Uwe/Wichard Woyke (H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5., aktual. Aufl. Opladen: Leske+Budrich 2003. Lizenzausgab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3.
- Antikainen, Ari. 2006. “In Search of the Nordic Model in educ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3. 229-243.
- Bentley, T., Jupp, B. and Stedman Jones, D. 2000. *Getting to Grips with*

Depoliticization, London: Demos. (<http://www.demos.co.uk>, accessed 6 June, 200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Hrsg.) 197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und Grundsätze der Zusammenarbeit zwischen Bundesregierung und politischen Stiftungen. Abgedruckt im Anhang des Protokolls der Sitzung des Ausschusses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des Deutschen Bundestages am 3.10.1973. Bonn.

Carmines, Edward and James Woods, 2002. "The Role of Party Activists in the Evolution of the Abortion Issue," *Political Behavior*, Vol. 24, No. 4.

Converse, Philip. 1972. Change in the American electorate. In Angus Campbell and Philip Converse (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Dalton, R. and Wattenberg, M. 2000. *Politic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riedrich–Ebert–Stiftung (Hrsg.) 1975: Friedrich–Ebert–Stiftung 1975. Bonn. Gemeinsame Erklärung der Friedrich–Ebert–Stiftung (FES), Konrad–Adenauer–Stiftung (KAS), Friedrich–Naumann–Stiftung (FNS), Hanns–Seidel–Stiftung (HSS), Heinrich–Böll–Stiftung (HBS) 1999, Bonn/St. Augustin/Königswinter/München/Berlin.

Guttmann, Amy. 1999. *Democratic Educ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gue, Rod and Martin Harrop. 2007. *Political science: A Comparative Introduction*, 5th ed. Rev. Palgrave Macmillan.

Hecló, Hugh and Henrik Madsen. 1978. *Policy and Politics in Sweden: Principled Pragmatis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Hillygus, D. Sunshine, 2005. "The Missing Link: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Political Behavior*, Vol. 27, No. 1.

- Jahresberichte 2001 der sechs politischen Stiftungen Friedrich–Ebert–Stiftung (FES), Konrad–Adenauer–Stiftung (KAS), Friedrich–Naumann–Stiftung (FNS), Hanns–Seidel–Stiftung (HSS), Heinrich–Böll–Stiftung (HBS), Rosa–Luxemburg–Stiftung (RLS); Bonn/ Sankt Augustin/ Berlin/ München/ Berlin/ Berlin, 2002.
- Johannes Karl Richter, Die Reichszentrale für Heimatdienst: Geschichte der ersten politischen Bildungsstelle in Deutschland und Untersuchung ihrer Rolle in der Weimarer Republik, Berlin 1963.
- Klaus W. Wippermann, Politische Propaganda und staatsbürgerliche Bildung: Die Reichszentrale für Heimatdienst in der Weimarer Republik, Köln 1976.
- Koblik, Steven. ed. 1975. *Sweden's development from poverty to affluence, 1750–197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raft, Lothar. "Parteieninstitute: Erziehung zur Demokratie", Parteiendemokratie und die Rolle der politische Stiftungen in Korea und Deutschland, 2008.
- Kress, Roland 1985: Die politischen Stiftungen in der Entwicklungspolitik. Bochum.
- Langguth, Gerd 1993: Politische Stift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 43.
- Letki, Natalia, 2006. "Investigating the Roots of Civic Morality: Trust, Social Capital, and Institutional Performance," *Political Behavior*, Vol. 28, No. 4.
- Lundin, Martin, Oskar Nordstöm Skans and Pär Zetterberg. 2011. "Political training as a pathway to power: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student union councils on political candidacy." (*Ofullständigt*) papper för presentation vid PolSek–deminariet. Statsvetenskapliga institutionen, Uppsala Universitet.
- Lundkvist. 1975. "Popular Movements and Reforms," Steven Koblik. ed. *Sweden's Development from poverty to affluence, 1750–1970*.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ir, P. 1994. "Party Organization: From Civil Society to the State," in *How Parties*

- Organize: Change and Adaptation in Party Organization in Western Democracies*, ed. R. Katz and P. Mair, Thousand Oaks, CA and London: Sage.
- Mair, P. and van Biezen, I. 2001. "Party Membership in Europe, 1980–2000," *Party Politics*, Vol. 7.
- Miller, R. 2005. *Party Politics in New Zealand*, South Melbourne, Victoria: Oxford University Press.
- Niemi, Richard, and Junn, Jane. 1998. *Civic Education: What Makes Students Lear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SCE/ODIHR. "Sweden: General Elections 19 September 2010." *OSCE/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9–11 June 2010*. (July, 2010).
- Richard Strahl, Arbeit und Organisation des Reichsheimatdienstes, in: Reichszentrale für Heimatdienst (Hrsg.), *Zehn Jahre Reichsheimatdienst*, Berlin 1928.
- Rosenstone, Steven, and Hansen, John Mark.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SAP. *Organizational inquiry*. www.socialdemokraterna.se.
- SCB. 2005. *Education in Sweden 2005–labor and education statistics*. SCB.
- Scott, Franklin D. 1977. *Sweden: the Nation's History*.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kolverket. 2011. *Facts and Figures 2011: 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Stockholm: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Stjärnehag, Klas, Olof Sand, and Arbetarnas Bildningsförbund. 2004. *Good Circle Leader Development for the Trade Union: A strong union education and voluntary adult education*. ABF & LO.
- Sundberg, J. 2002. "The Scandinavian Party Model at the Crossroads," in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ed. P. Webb, D. Farrell and I. Holida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weden. National Government on Budget Statement. 2007. *Budget Statement:*

Economic and Budget Policy Guidelines 2007. 19 Nov.

Telhaug, Alfred Oftedal, Odd Asbjorn Mediås and Petter Aasen,. 2006. “The Nordic Model in Education: Education as Part of the Political System in the Last 50 Years.”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3. 245–283.

Vierregge, Henning von 1977: Parteistiftungen. Baden–Baden.

Wolfinger, Raymond,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참고 웹사이트

스웨덴 정부 웹사이트 <http://www.sweden.gov.se>

스웨덴통계청 웹사이트 <http://www.scb.se>

민주주의와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협회 웹사이트 <http://www.idea.int>

스웨덴국립교육청 웹사이트 <http://www.skolverket.se>

스웨덴사민당 웹사이트 <http://www.socialdemokraterna.se>

스웨덴보수당(온건당) 웹사이트 <http://www.moderat.se/>

스웨덴자유당 웹사이트 <http://www.folkpartiet.se>

스웨덴사민당스터디포탈 웹사이트 <http://www.socialdemokraterna.abf.se>

사민당청소년조직(young eagles) 웹사이트 <http://www.ungaornar.se>

노동자교육협회 웹사이트 <http://www.abf.se>

성인교육협회 웹사이트 <http://www.sv.se>

민중의 집 웹사이트 <http://www.fhp.nu>

팔메국제센터 웹사이트 <http://www.palmecenter.se>